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2022. 04. 20. (수) 13:30 - 18:00

발표자료집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목 차

| | |
|-----------|-------|
| 04 | 프로그램 |
| 05 | 연사소개 |
| 15 | 개회식 |
| 23 | 기조세션 |
| 37 | 세션 I |
| 55 | 세션 II |

프로그램

| | | | |
|-------------|-------|---|--|
| 13:00~13:30 | | 등록 | |
| | 개회식 | 개회사 | 홍장표 KDI 원장 |
| 13:30~13:50 | | 축사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
| 13:50~14:20 | 기조세션 | 「선진한국」을 여는 우리의 선택 기조연설 진념 前 경제부총리 | |
| 14:20~14:30 | | 기념사진 촬영 및 휴식 | |
| | | 새로운 도전과 과제 | |
| 14:30~15:00 | 세션 I | 발표 | 국가미래전략: KDI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글로벌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도전과제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
| | |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5대 분야를 중심으로 | |
| | | 기술패권시대의 산업·통상정책: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전략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 |
| |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 방향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 | |
| 15:00~16:15 | 세션 II | 발표 | 급격한 인구고령화 시대의 인적자원 정책 방향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거점형 지역발전 문운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
| | |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
| 16:15~16:40 | | Q & A | 대국민 질의응답 |
| 16:40~17:00 | | 휴식 | |
| | | 종합토론 | |
| | | 좌장 |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
| | |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 | | | 장윤종 前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
| 17:00~18:00 | 종합토론 | 토론 |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창훈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
| | | Q & A | 질의응답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연사소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개회식

개회사



홍장표 | KDI 원장

2021.05 - 현재 KDI 원장 및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2018.07 - 2020.1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07 - 2018.06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2014.02 - 2015.02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2014.01 - 2015.12 한국지역정책학회 이사
1991.03 - 2021.05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축사



정해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021 - 현재 제8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018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 - 2019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2017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2000 - 2020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현곤 |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2020 -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2019 - 2020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원장
1996 - 201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장, 부원장
1990 - 1996 일본 쓰쿠바대학교 사회공학연구과 박사
1980 - 1984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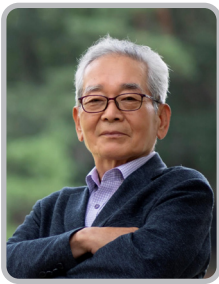


김병연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2021 - 현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2006 -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3 - 2006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6 - 2003 영국 예식스대학교 교수
2018 대한민국 학술원상,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기조세션. 「선진한국」을 여는 우리의 선택

발표



진념 | 前 경제부총리

| | |
|-------------|-----------------|
| 2000 - 2002 |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부총리 |
| 1999 - 2000 | 기획예산처 장관 |
| 1997 - 1998 | 기아그룹 회장 |
| 1995 - 1997 | 노동부 장관 |
| 1991 - 1993 | 동력자원부 장관 |

세션 I. 새로운 도전과 과제

발표



송인호 |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 |
|-------------|----------------|
| 2022 - 현재 |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 2018 - 2021 |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
| 2017 - 현재 |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 |



정대희 |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 | |
|-------------|-----------------------|
| 2022 - 현재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 2021 - 현재 |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
| 2018 - 2020 | 세계은행 Senior Economist |
| 2012 - 2013 | KDI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세션 II.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



구자현 |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2021.11 - 현재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2021.12 - 현재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2021.04 -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위원
2013.02 - 2021.11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금융경제연구부, 지식경제연구부
1996.01 - 2013.01 한국은행 차장



이화령 |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

2013 - 현재 KDI 연구위원
2017 - 현재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사
2021 -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
2018 - 2020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
2016 - 201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세션 II.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



한요섭 |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016 - 현재 KDI 연구위원
2021 - 현재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2021 - 현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포럼 위원
2021 - 20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령사회대응연구회 위원
2019 - 2021 통계청 중사상지위분류 개정 및 표준화 추진 TF 위원



문윤상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2017 - 현재 KDI 부연구위원
2020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이영욱 |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013.09 - 현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017 - 2018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2016 - 2019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2015 - 201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

종합토론

좌장



주현 | 산업연구원 원장

2021 - 현재 산업연구원 원장
2017 - 2019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
2015 - 2017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2015 - 2017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1985 - 2020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 산업경제연구실장, 부원장 역임)

토론



김홍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2020 -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및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
2022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2021 - 현재 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경제통상분과 위원장
2021 - 현재 청와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2021 - 현재 한국APEC학회 회장



장윤종 | 前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2021 - 현재 KDI 초빙연구위원
2019 - 2020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2017 - 2018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
2015 - 2016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1983 - 2018 산업연구원 재직(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 부원장 등 역임)

종합토론

토론



이철희 | 서울대학교 교수

1998.09 -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9.09 - 2010.08 미국 UCLA 방문교수
2002 - 현재 미국 NBER Research Economist
1997.09 - 1998.08 미국 뉴욕주립대학교(빙햄턴) 경제학과 조교수
1996.09 - 1997.08 미국 시카고대학교 인구경제학연구소 연구원



박진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1 -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8 - 2020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2012 - 20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1998 - 2001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행정개혁팀장
1992 - 1998 KDI 부연구위원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 -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 - 2022 대통령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촌사회분과 위원
2021 - 2022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2020 - 202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2020 - 2022 보건복지부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위원



성창훈 |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2021 - 현재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2020 - 2021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2016 - 2019 홍콩총영사관 재경관
2015 - 2016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
2014 - 2015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개회식

| | |
|-----|----------------------|
| 개회사 | 홍장표 KDI 원장 |
| 축사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 |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
|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홍장표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컨퍼런스의 기초연설을 흔쾌히 맡아주신 진념 전 경제부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컨퍼런스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여해주신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님,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대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전략기술과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 신자유주의 시대에 품어왔던 세계화의 물결이 퇴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배경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이 자국과 동맹국 사이의 협력에 의존한 동맹 공급망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질서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전 세계가 냉전시 체제에 들어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 한국 경제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같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KD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법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KDI는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았으며 올해는 새로운 5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KDI는 향후 50년을 내다보면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국가전략연구를 통해 미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연구조직 개편으로 글로벌 정책패러다임 변화, 기술패권경쟁시대 산업통상전략, 디지털경제, 인구구조대응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을 총괄하는 KDI 미래전략연구팀을 조직해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그간 미래전략연구팀에서 준비한 7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여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오늘 컨퍼런스의 화두인 ‘국가미래전략연구’는 개별 연구기관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전문연구기관들과의 융복합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와 외부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간 연구회에서는 연구기관들 간의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KDI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달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KDI는 앞으로 센터를 통해 경륜과 해안을 겸비한 중견 연구인력과 뛰어난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 연구인력 사이의 연구협력플랫폼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함께 하신 국회미래연구원 원장님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종합토론에서 사회를 맡아주신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 장윤종 원장님, 이철희 서울대 교수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님, 성장훈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협력과 교류의 깊이를 더해주시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KDI도 이번에 마련한 연구협력플랫폼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DI 원장 | **홍장표**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를 축하드리며, 이를 준비해주신 KDI 홍장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는 미래연구기관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축사를 맡아주셨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김현곤 원장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김병연 원장님이 그분들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편 진념 전 경제부총리님께서도 기조연설을 맡아주셨는데,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입니다. KDI가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것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국제질서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세계적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경쟁은 전통적 안보를 넘어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한편,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서방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러 중심의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대전환이라 일컫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계층적 불평등의 심화와 지역적 발전 격차의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및 그린 전환 등이 그것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개개인들의 삶에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화들입니다.

이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전환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 왔던 과거와는 매우 다른 미래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어떤 미래가 도래할 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기될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직은 당장 제기되는 문제에 대처하며,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는 어렵פות이 짐작만 할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계나 정책집단에서는 미래 연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 차원의 대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국회에서는 이미 미래연구원이 활동을 지속해 왔고, 서울대에서도 최근 미래전략연구원이 출범하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역시 최근 직제 개편을 통해 국가전략연구센터를 설치했고, KDI 역시 일전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나서 상호 소통하고 협조하여 미래연구, 국가전략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컨퍼런스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즈음하여 국가미래전략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 기대합니다.

오미크론이 약화되고 있어 조만간 많은 분들을 직접 모시고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입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쌍크탱크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KDI가 주도해서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하시는 것을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라서 더욱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국가미래전략연구의 방향성에 관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님의 기조연설과 함께, 대한민국이 맞이할 새로운 미래도전과 해결과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와 실천전략에 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어 많이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미래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성공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직속의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가 발족되어 1년간의 작업 끝에 지난해 말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 미래비전과 핵심아젠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이 작업을 지원하면서 국가미래전략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얻었던 소중한 경험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난 30여년간의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5년 임기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100대 국정과제 등의 형태로 국가전략을 수립해왔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제각기 5년 단위의 국가전략을 새로 제시하면서, 이전 정부의 국가미래전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현상을 반복해왔습니다. 국가전략의 수명은 항상 5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새 정부부터는 임기 5년간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와 병행해서, 임기 5년을 넘어 이후의 정부에서도 15년, 20년간 일관되게 추진할 중장기 국가미래전략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지속가능성장을 실제로 담보하는 일관된 국가전략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가 그런 중장기 국가미래상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국가미래전략 공론화의 본격적인 첫 시작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행사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 김 현 곤

축사

홍장표 KDI 원장님, 고영선 부원장님, KDI의 훌륭한 경제연구자들에게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컨퍼런스는 기술패권경쟁 하의 우리 경제전략, 디지털 플랫폼 경제, 고령화, 지역발전, 사회안전망 등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주요 어젠더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경제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데 탁월한 KDI의 역량을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KDI는 좋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전문성과 객관성, 균형 감각을 갖춘 KDI의 연구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세계는 과거와 다릅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문제가 얽혀있는 가운데 강대국들은 생존까지 걸고 경쟁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욱 KDI가 힘을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로 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탁월한 정책 연구 성과를 낼 뿐 아니라 사회와 더욱 소통해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책은 여론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KDI가 우리 국민과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독립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은 공간 찾기 같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얽혀있어 정책을 실행하면 승자도 있지만 패자도 생깁니다. 아마추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 즉 승자가 많아지고 패자는 줄어드는 공간을 실력자는 보고 만들 수 있습니다. 학술연구자들은 전체 후생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 의미를 두겠지만, 정책 연구를 하는 KDI는 전체 후생의 배분에 까지 관심을 가져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책연구는 정치경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KDI가 이에도 탁월한 성과를 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KDI가 국가미래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며 이런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KDI가 우리 경제정책의 등불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 **김병연**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기조세션

「선진한국」을 여는 우리의 선택

진 념 | 前 경제부총리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2022.04.20.

「선진한국」을 여는 우리의 선택

진 념

- 1 한국 경제·사회발전 60년-자랑과 보람
- 2 오늘의 한국경제, 위기인가?
- 3 선진 한국을 위한 비상(飛翔) 전략
- 4 시급히 극복해야 할 ‘리스크’
- 5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책무

1 한국 경제·사회발전 60년-자랑과 보람

- | 지구촌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 | 산업화의 성공 ‘모델’ **한강의 기적**
- | 농경사회 → 경공업 → 중화학공업 → **첨단산업**
- |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 |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 실현

‘위기’를 ‘기회’로 – 국민 저력

자랑과 보람

2 오늘의 한국경제, 위기인가?

- 뉴노멀(new normal)- 저성장 추세
- ‘글로벌’ 패권경쟁: 무역·기술·안보
 - 팬데믹, 환경·기후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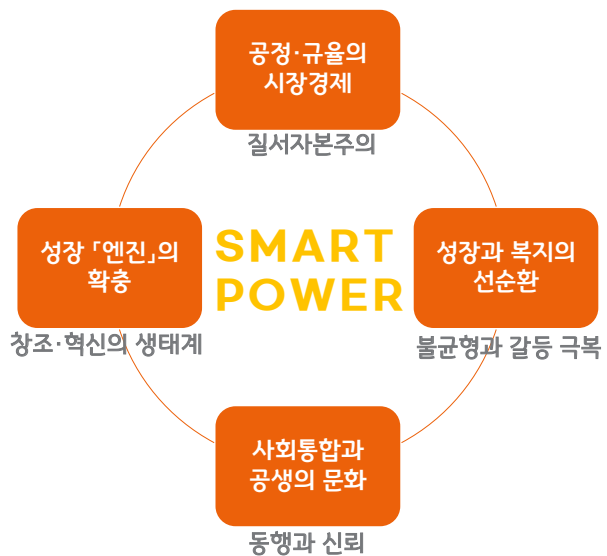
대전환의 시대:
엄중한
대외 환경

한국경제
리스크

- 성장 잠재력 하락: 소득 3만불의 함정
- 고용사정의 악화 및 소득 불균형
- 주력산업 경쟁력의 위협
- 서비스산업 장벽은 철벽-성장동력 제약
- 경제의 정치화: 분열·갈등 조장

경제 활력이 식어가고 있다

3 선진한국을 위한 비상(飛翔) 전략



- 내외 환경은 매우 엄중
- 사회통합의 신성장 전략

- ✓ 하면 된다 - 자신감
- ✓ 세계 1등 위기관리 능력
- ✓ 한국인의 DNA와 역동성
- ✓ 한류와 K-POP 열풍

* Smart Power: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창의·혁신으로 융합해 가는 힘

3-1. 공정·규율의 시장경제 | 질서자본주의

- | 자유기업 활동의 보장 – 도전과 혁신 기업가 정신
- | 경제규율과 무관한 규제·간섭 배제
 - 글로벌 수준 규제 정비
- |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 업종에 집중
 - 기업경영과 ‘돈벌이’ 구분
- | 경제단체 「공정, 투명, 책임 경영」 선언과 실천

공정경쟁 질서 준수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3-2. 성장 「엔진」의 확충 | 창조·혁신의 생태계 조성

- | 기술·브랜드 역량으로 승부 – First Mover
- | 경제영토 확장과 글로벌 경영 역량 확충
- | 서비스 산업 「빅뱅」 - 물류·의료·문화·관광·교육
- | 소프트웨어·콘텐츠(창조산업) 집중 지원
- | 「벤처」 정신·「창업」 풍토 확산(K-POP)

창조적 인재양성은 혁신경제 필수요건

3-3.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지속 가능한 포용성장

- | 중부담·중복지 - 중기 프로그램 마련
- | 출산·보육·육아는 미래 투자
- | 복지프로그램 전면 재점검 - 전달체계 정비
- | 일하는 복지 > 성장잠재력 키우는 복지 > 나누는 복지
- | 노·사·정 대타협으로 고용 안정 및 유연성 제고

성장이 복지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성장 없는 복지는 환상

3-4.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 | 동행과 신뢰

- | 「원칙과 기본」 - 믿음·희망 함께 나누는 사회
- | 아름다운 동행 - 앞선 사람에게 박수, 뒤쳐진 사람에겐 더 많은 기회를
- | 기득권 계층의 절제와 자기헌신
- | 공동체 문화·의식·가치의 정립 - 신뢰(trust)

4 시급히 극복해야 할 ‘리스크’

4-1. 정치권의 혁신, 정치 리스크 극복

- |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 「파트너」 불인정
- | 미래 비전보다 과거에 매몰 - 「패거리 정치」와 흠집내기
- | 갈등 조정 - 갈등 조장
- | 정당 지배구조 - 민주화 멀어
 - 자율적 의원 의사 결정제약 - 공천권
 - 제도권 밖 사회단체에 의존
 - 정치 아닌 법적 판단에 맡겨 - 정치의 포기?
- |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경제는 정치인이 잠들 때 성장한다?
제발 일하면서 싸우자

엄중한 외부환경, 민생 어려운데도 정치권은 싸움만

4-2. 정부 리스크, Smart 정부

- | 경제정책의 요체는 실용성과 지속가능성
- | 정부가 꼭 있어야 할 데 – 개입해서는 안될 데
- | 정부의 책임: 국가안보·국민안전·법과 질서 확행
- | Eco 생태계 조성하고 기업들 뛰게 해야
- | 쉬운 일만 찾지 말고 어려운 일 해결에 주력
- | 함께하는 개혁: 경영계·노동계·정부

시스템과 거버넌스 재정립 – 권한과 책임 분명히

5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책무

5-1. KDI와의 인연: “비판적 동반자”

1972 - 1973 '3% 물가안정정책'
1975 - 1976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
· 형평(equity)과 사회개발정책 도입

1998 - 2000 공공투자관리센터
· 예비타당성조사
재정·공공부문 개혁

1970s

1980s

1990s

2000s

1980 - 1988 경제안정화 시책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국민연금, 최저임금, 의료보험제도

2004 한국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2013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 시작
2015 글로벌지식협력센터(GKEDC)
2014 - 2016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5-2. KDI의 주요 성과



5-3. 지금은 성찰의 시기

- | KDI의 위상과 핵심 역량의 재평가
- |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싱크탱크 ‘플랫폼’ 역할
- | 전문성, 현장성에서 타 연구기관과의 차별성
- | 연구과제 선정과 결과물에 대한 수요자 평가
- | 국책,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
- | 주요 정책 전환기, 정책대안 공론화 역할
- | 정부와 시장의 시각 차이를 해소하는 노력

5-4. 다시 시작하는 다짐으로

연구 ● 연구과제 선정, 연구결과 평가 ‘시스템’ 정비

**협력과
소통**

● 연구기관 간의 업무 조정과 협력

● 수요자(정부, 시장 등)와의 소통 - 마케팅 배가

**거버
넌스**

● 한국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 선택과 집중

● 홍릉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운영제도 개선

● 거버넌스 정비 -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

● 특정 정권의 연구원 → 「국민의 미래」를 여는 연구원으로

소명과 보람

‘도전’과 ‘혁신’은 우리의 소명

‘과거’를 넘어 ‘미래’에 역량 집중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세션 I

새로운 도전과 과제

발 표

국가미래전략: KDI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송인호 |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글로벌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도전과제
정대희 |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Contents

- 01 KDI 국민여론설문조사 개요
- 02 새정부의 국정최고목표
- 03 새정부의 구체적 정책수행 방향

01 KDI 설문조사 개요

01 KDI 국민여론조사 개요

-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에 관한 설문으로 2022년 3월17~3월 18일 양일간에 걸쳐 경제전문가 518명, 일반국민 1000명이 응답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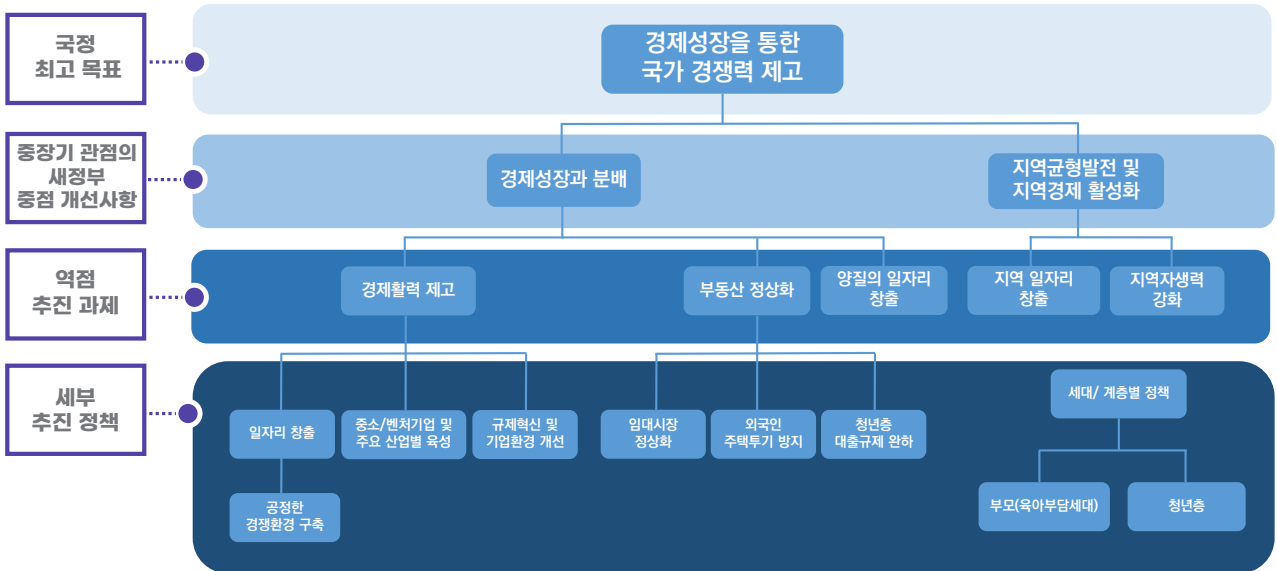
경제전문가 응답 현황

| 직업군 | 응답자 수(명) | 비중 |
|-----|----------|--------|
| 교수 | 175 | 33.8% |
| 연구원 | 98 | 18.9% |
| 기업인 | 182 | 35.1% |
| 금융인 | 63 | 12.2% |
| 전체 | 518 | 100.0% |

일반국민 응답 현황

| 구분 | 응답자 수(명) | 비중 | |
|-----|----------|-----|-------|
| 성별 | 남성 | 511 | 51.1% |
| | 여성 | 489 | 48.9% |
| 연령대 | 20대 | 193 | 19.3% |
| | 30대 | 198 | 19.8% |
| | 40대 | 235 | 23.5% |
| | 50대 | 252 | 25.2% |
| | 60대 이상 | 122 | 12.2% |

KDI 국민여론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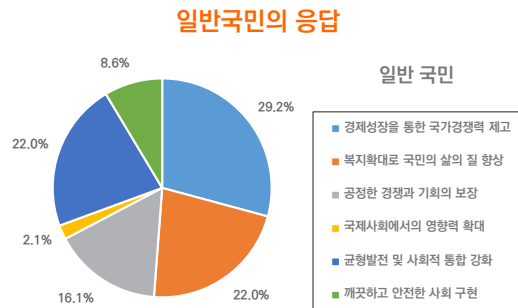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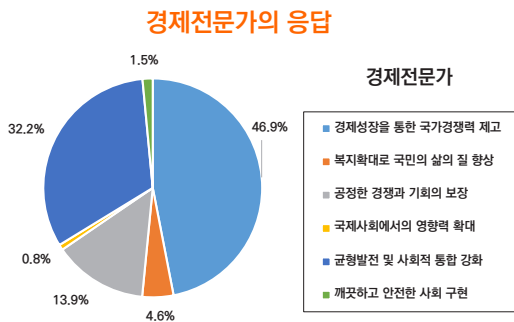


02

새 정부의 최고 국정목표는?

02 새 정부의 국정 최고 목표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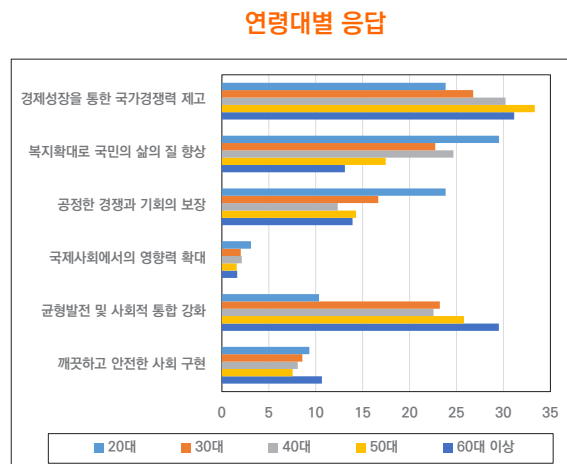
- 새 정부에서 추구해야할 국정 최고 목표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또는 ‘복지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보다도 더 우선적 고려할 필요
 - 경제전문가의 46.9%가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수행해야한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는 32.2%를 차지
 - 일반국민의 29.2%가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이어서 일반국민의 22%가 ‘복지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목



02 새 정부의 국정 최고 목표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로…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국정 최고 목표로 지목한 가운데 20대는 ‘복지확대’(25.9%)와 ‘공정경쟁’(23.8%)의 순서로 중요한 국정목표를 생각함에 따라 20대에 타겟팅한 국정 수행은 별도의 고민 필요

- 20대에서는 복지확대(29.5%), 공정한 경쟁(23.8%), 경제성장(23.8%)의 순서로 중요한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
- 30대는 경제성장(26.8%)를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선정하였고, 균형발전(23.2%) 및 복지확대(22.7%)도 관심을 보임
- 50대 및 60대 이상에서는 경제성장을 국정 최고 목표로 지목(각각 33.3%, 31.1%)하였고, 다음으로 균형발전(25.8%, 29.5%)를 주요 목표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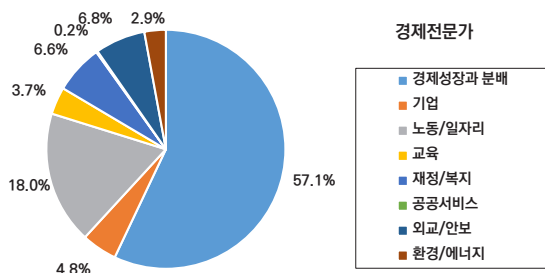


03 구체적 정책수행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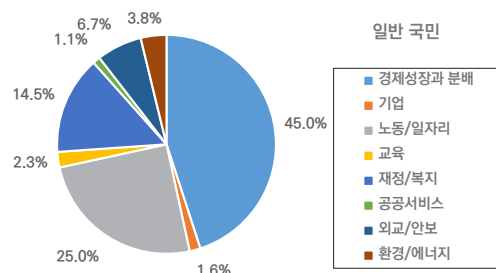
03 중장기 중점적 정책 방향으로 '경제성장'과 '분배'를 주목할 필요

-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국정 목표 하에 **중장기적 정책방향에서** 새 정부가 임기 기간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경제성장'과 '분배'** 그리고 **'노동/일자리'**를 지목
 - 경제전문가(57.1%)와 일반국민(45.0%) 모두 중점 개선 분야로 '경제성장'과 '분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목한 가운데 다음으로는, 경제전문가(18.0%)와 일반국민(25.0%) 모두 '노동/일자리'를 지목하고 있음.

경제전문가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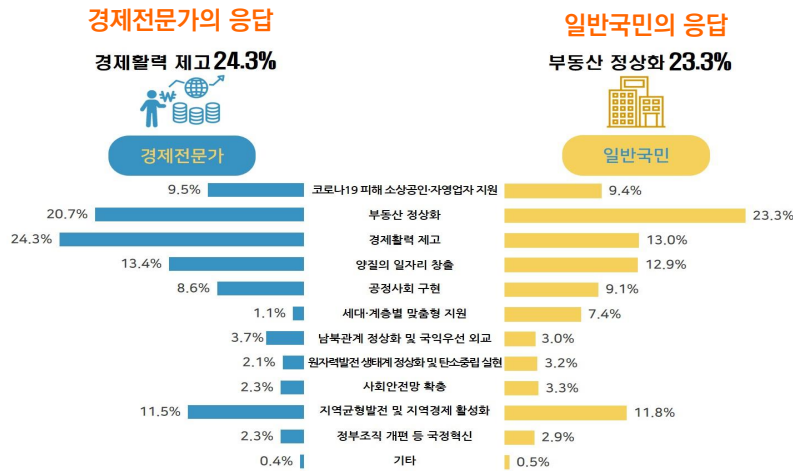


일반국민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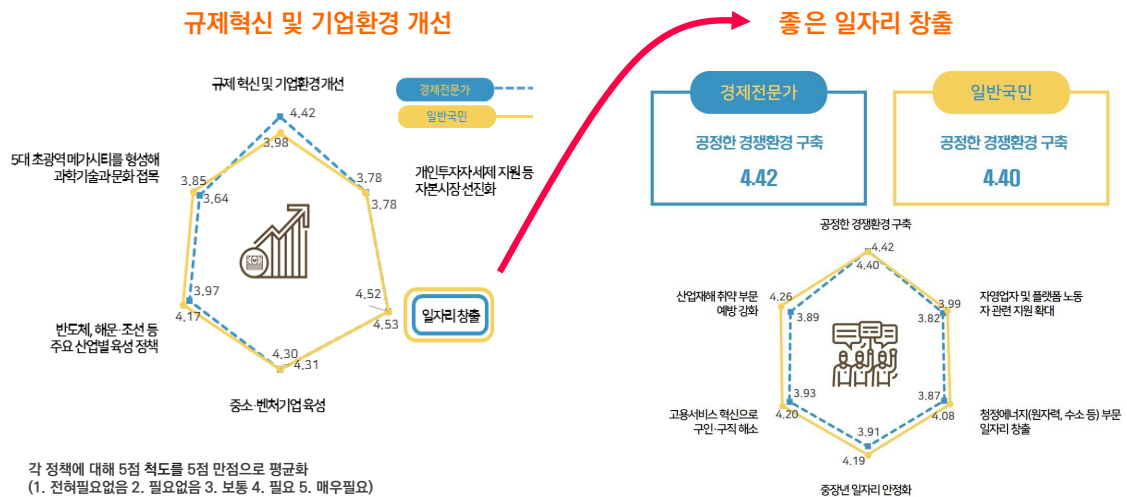
03 단기 중점적 추진 과제로는 '경제 활력'과 '부동산 정상화'를 당부

- 단기적 관점에서 새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 방향으로 경제전문가(24.3%)는 '경제활력제고'를 일반국민(23.3%)은 '부동산 정상화'를 당부
 - 부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생각



03-1 경제활력제고를 위해선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에 주력

- 경제활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자리창출' 그리고 '규제혁신 및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
-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가장 먼저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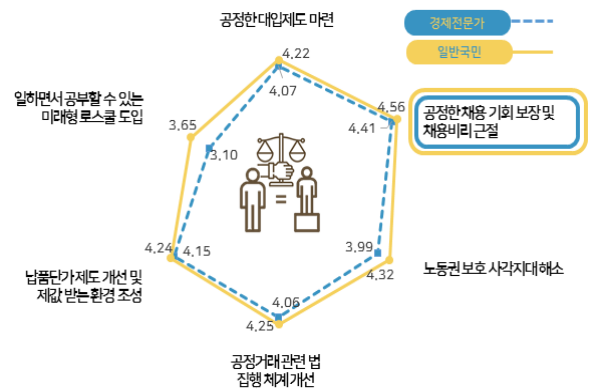


03-2 공정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및 채용 비리 근절’을 가장 먼저 추진할 필요

- 경제전문가는 ‘공정한 채용 기회보장 및 채용비리 근절’(4.41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납품단가제도 개선 및 제값받는 환경조성’(4.24점)을 주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일반국민은 ‘공정한 채용 기회보장 및 채용비리 근절’(4.56점)을 최우선으로 뽑았고,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4.22점)도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
- 이외에도, ‘공정거래관련법 집행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모두 인식하고 있음

공정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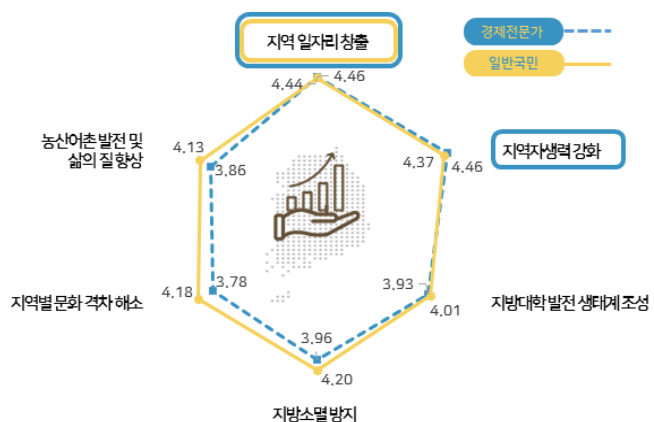
각 정책에 대해 5점 척도를 5점 만점으로 평균화
(1. 전혀필요없음 2. 필요없음 3.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03-3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자생력 강화’ 당부

-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점 과제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 자생력 강화’를 지목

-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는 ‘지역일자리창출’(4.46점, 4.44점)과 ‘지역 자생력 강화’(4.46점, 4.37점)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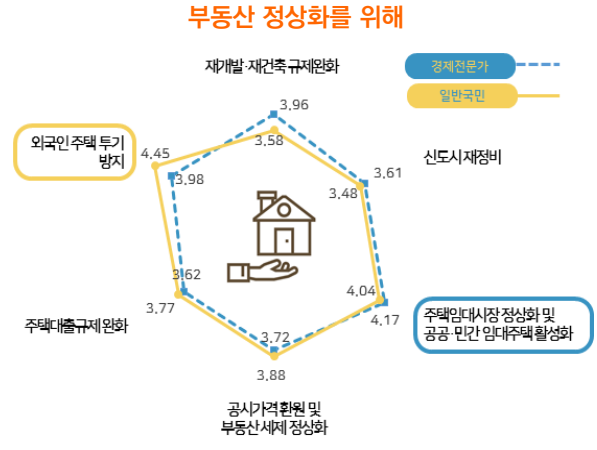


각 정책에 대해 5점 척도를 5점 만점으로 평균화
(1. 전혀필요없음 2. 필요없음 3.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03-4 한편,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선 ‘임대시장의 정상화’를 우선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공공/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대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

- 경제전문가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공공/민간 임대주택 활성화’(4.17점)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했으며,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3.98점)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3.96점)도 주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일반국민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4.45점)를 최우선으로 뽑았고,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공공/민간 임대주택 활성화’(4.04점)도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
- 이외에도, 세제 정상화 및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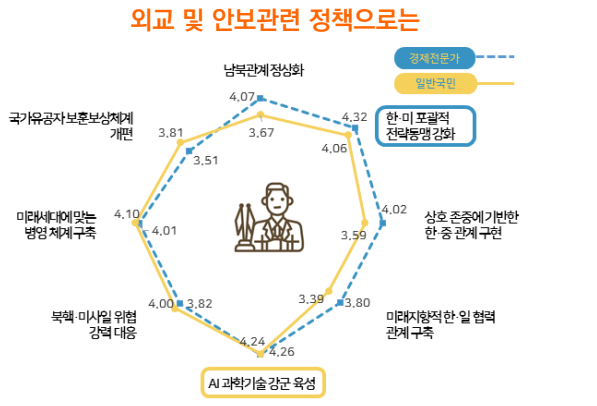


각 정책에 대해 5점 척도를 5점 만점으로 평균화 (1. 전혀필요없음 2. 필요없음 3.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기타 아울러, 외교 및 안보 관련 정책으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강화’를 우선으로

외교 및 안보 관련 정책으로 경제전문가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강화’를, 일반국민은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우선적으로 당부

- 경제전문가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강화’(4.32점)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당부하고 있음.
- 일반국민은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4.26점)을 최우선으로 뽑았고, 그 다음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강화’(4.32점)로 지목했음.
- 이외에도,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을 당부했음.



각 정책에 대해 5점 척도를 5점 만점으로 평균화 (1. 전혀필요없음 2. 필요없음 3.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글로벌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도전과제*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 본 자료는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의 자문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Contents

01
글로벌 경제정책
환경 변화

02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01 글로벌 경제정책 환경 변화

01 1. 미중 전략 경쟁

| 포괄적 보호주의: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포괄적 보호주의 및 보호주의의 진영화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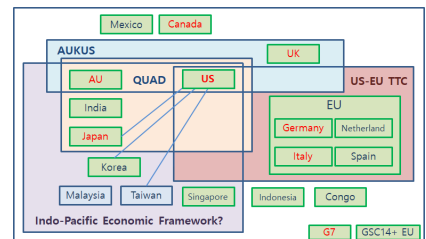
포괄적 보호주의 등장

- ‘상품무역관세’ 중심에서 ‘해외 경제주체 대상 모든 종류의 차별적 정부개입’으로 진화된 보호주의 (Evenett, 2019)
- ‘비시장경제’ 중국의 보조금 지급, 국유기업 지원, 외국 자본 통제, 기술 탈취 등 다양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자 했던 미국의 대응이 그 배경
- 코로나 발발은 포괄적 보호주의를 더 강화하는 계기, 미·중 전략경쟁은 미래 최대의 공급망 교란 요인으로 작용

보호주의의 진영화 시도

- 유사국을 규합해 반중 공동전선을 펴고자 하는 ‘보호주의의 진영화’
- 첨단 이중용도(경제 및 군사용) 기술 분야에서만 중국을 공급망에서 분리
- 우방 진영 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
- QUAD, G7, TTC, G14+EU, IPEF 통한 연대의 중층적 형성

| 미국의 다차원적 공급망 강화 노력



01 2. 산업정책의 부활(1/2)



미국 : 공급망

- 공급망을 강화하여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21세기형 산업정책을 추진
- 5대 축:
 - 공급망 회복력
 - 목표 지향 공공투자 확대
 - 공공조달의 전략적 이용
 - 기후위기 대응 강화
 - 평등과 공정성 강화



중국 : 쌍순환

- 기존의 국제대순환 전략에서 국내순환에 중점을 두는 쌍순환 전략으로 이행
- “중국제조 2025”(2015), “14.5 규획”(2021) 등의 정책을 통해 제조업 지원(조립대국 → 제조강국)
- 미국 주도 글로벌 기술체제 디커플링에 대응하여 기술자립화 정책을 강화



EU : 전략적 자율성

- 핵심 원자재, 기술, 식량, 인프라 등 전략 부문에 대한 대외 의존도 축소와 유럽 내 생산을 강화하는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 정책을 추진
- 산업전략 업데이트(2021.5.)에서 배터리,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제품의 자립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발표



일본 : 전략적 불가결성

-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불가결성 (strategic indispensability) 확보를 위해 통합 혁신 전략,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창설 등 대응 체제 구축
- 신흥기술 선점 경쟁을 위해 과학기술중합정책인 통합 이노베이션 정책을 추진(2020.7.)

5

01 2. 산업정책의 부활(2/2)

| 경제안보의 부상: 경제와 외교·안보의 결합으로 경제안보가 주요 정책분야로 부상

<전통적 산업 정책과 새로운 산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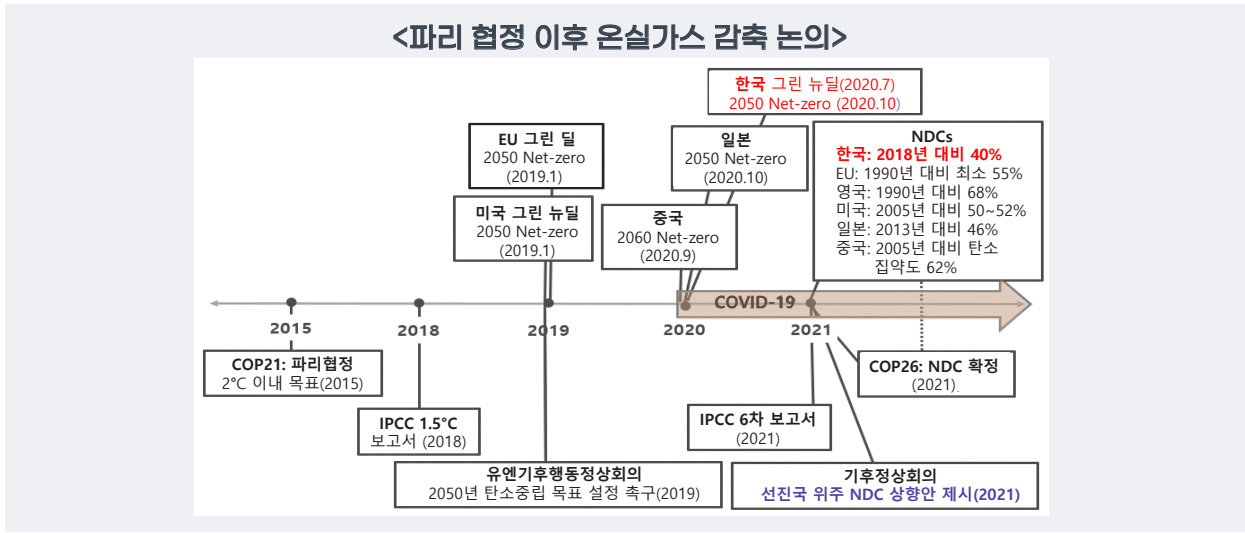
| | 전통적 산업정책 | 구조개혁 접근 | 새로운 산업정책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산업의 보호,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환경 정비 중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션 지향, 중장기 사회·경제과제 해결 |
| 이론적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실패의 시정과 유치산업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기능 중시 정부실패 우려 crowd out 효과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확실성 하 정부에 의한 시장의 창출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업가 국가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crowd-in |
| 정책 프레임 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시 공급측 관주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시 공급측 민주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시 정책과 거시 정책의 통합, 수요와 공급을 통합 산관학 연계, 규제·제도, 국제표준화, 민간자본 유도, 국제협력 등 정책 수단 총동원 |
|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용, 실용화 지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구 지향(소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심적, 극적 혁신 창출 |
| 정책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산업과 기술의 추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격한 비용효과 분석에 기초, 사전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의 스피드 오버, 학습 효과, 인재육성 효과 등 부차적 효과도 포함하여 평가 |

자료: 日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의 새로운 기축」, 2021

6

01 3. 기후변화 대응 행동 강화

상향된 NDC: 예상보다 빠른 기후변화 속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 필요



01 4.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디지털화 중심의 기술 진보: 데이터·플랫폼 경제 활성화, 일·소비 방식 변화

데이터 · 플랫폼 경제

- 서비스화(servitization): 제조업의 스마트화 및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과 서비스 융합
-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도 다중적으로 초연결된 사회에서 플랫폼에 의한 생산과 소비가 주류가 될 수도 있을 것
- 주로 빅테크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는 생산방식과 비즈니스모델을 재구성하면서 성장의 모멘텀 제공
- 디지털 전환의 보편화와 비대면 교류에 대한 확산에 따라 플랫폼은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분배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영향력이 확대·강화됨으로써 “플랫폼 자본주의”로 불릴만한 경향이 부상할 것(정의진 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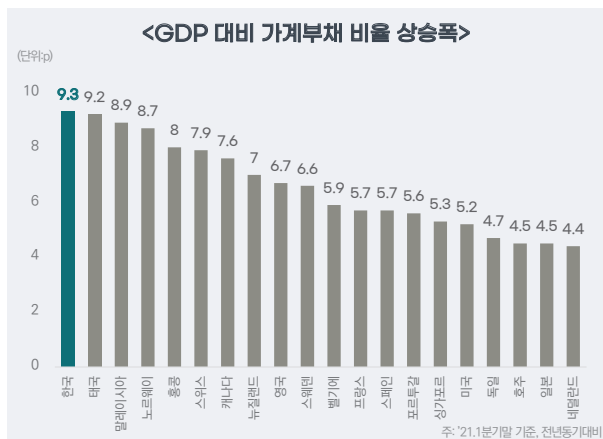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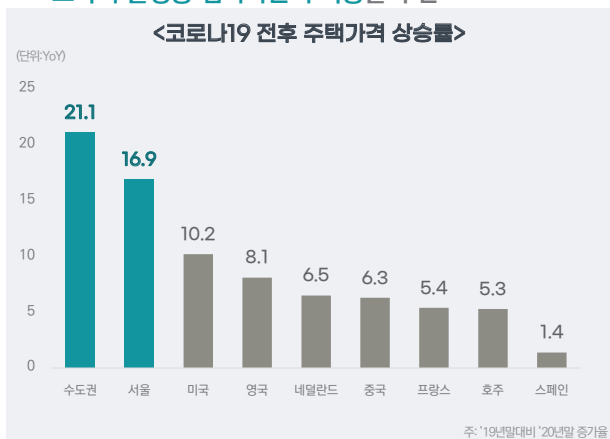
일 · 소비 방식 변화

- 일하는 방식 변화(재택근무 etc.), 일자리 양극화 현상, 소비 방식 변화
- 디지털 전환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실현으로 인해, 팬데믹 이후에도 일하는 방식은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특정 부문(예: 유통, 물류 부문 등)에서의 일자리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소상공인이 집중된 음식료업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심각한 일자리 감축 발생
- 비대면 소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e-commerce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인하여 미래의 소비방식 변화 전망

01 5. 불평등 심화 (2/2)

| 취약계층 노동 기반 약화: 코로나 19 경제위기 이후 불평등 확대 가능성

-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한 초저금리정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경기회복에는 기여했으나,
-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을 초래하여 부와 소득의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을 수반
-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는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인상이 수반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실을 확대시킬 우려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통화정책 정상화와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리스크, 2021
데이터: BIS, 부동산 114

02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02 1. 미중 전략 경쟁

I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참여: 새로운 단계의 미·중 경쟁 및 국제협력에 대한 각성

- 공급망 구축 난관**
 - 우방국간 공급망 (TVC: Trust Value Chain) 혹은 탈중국 공급망은 단기간 내 형성 가능성 크지 않을 전망
 - 우방국 간 신뢰 구축이 아직 취약해 보이며, 안보 논리와 시장 논리 간 균형과 조화 역시 쉽지 않을 것
 - 미국이 각 공정에 고루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정도만 우방국간 공급망 구축이 용이하나, 이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
- 가치·규범의 경쟁**
 - 미중 경쟁은 양자간 무역 분쟁과 기술패권 경쟁 수준을 넘어, **진영간 가치와 규범의 경쟁**, 안보 대립이 고조되는 보호주의의 진영화 단계에서는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 새 단계로 진입한 미중 경쟁에 대한 환경 변화에 대한 현실 인식이 필요
- 일관된 국제 협력**
 - 중요성이 커진 **국제협력에 대한 각성 필요**
 - 보호주의의 진영화 단계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국제협력에 좌우되는 상황에 처했음을 알려줌
 - 다자주의도 훼손되고 세계가 두 진영으로 양분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일관되고 원칙 있는 대응으로 국제적 고립을 피해야 함**
 - 하지만,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한 양자택일 식의 단면적이고 이분법적 시각을 벗어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조망이 필요**

11

02 2. 산업정책의 부활

I 새로운 산업정책: 전략성 회복, 미래역량 강화

- 경쟁 심화**
 - 첨단기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 격화
 - 자국 또는 지역 내 공급망 자립화 강화로 중간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위축될 수 있음**
 - 신기술, 신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산업강국 간 경쟁의 격화로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약**
- 새로운 국제 질서**
 - 미·중간 글로벌 공급망 디커플링과 **무역과 투자의 지역 블록화 강화**로 한국 산업의 글로벌화 전략 수정 필요
 - 소수의 전략 기술 및 산업은 디커플링,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역이 공존하는 부분적인 디커플링 가능
 -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 클럽형 무역질서의 구축 가능성** (미-EU 간 **무역기술이사회(TTC)**, 포괄적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
- 전략적 산업 정책**
 - 산업정책의 전략성 회복: 장기 계획 기능 강화, 사회적 미션 제시 및 선도 투자 실행
 - 경제안보 정책 강화, 생산적 정부지출 확대, 산업 및 노동정책 재정비
 -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한 접근법 등

12

02 3. 기후변화 대응 행동 강화

| 저탄소 사회로의 균형적 전환: 탄소배출 감축, 산업경쟁력 확보, 기술투자 및 공정한 전환

국제 사회 압력

- 선진국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제사회로부터 감축 압력을 받아왔음
- 이에 대응해 우리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으며 '2030년 NDC 상향조정안(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

경제적 비용

- 에너지 집약적 수출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 경제의 특성 상 2050 탄소중립목표나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적 비용은 OECD 평균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적으로 향후 10년간 공공부문의 경우 GDP 규모의 0.5-4.5% 수준 (대체로 2%)에 해당하는 신규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김현석, 2021)
- 하지만 우리나라의 2021년 그린 뉴딜 예산(5,044억원)의 GDP 대비 비율은 0.39%로, 최근 2년간 기후관련 독일 연방정부 예산의 GDP대비 비중(약 1%로 추정)에 비해 낮은 수준(오형나, 2021)

저탄소 전환

- 배출권 거래제 등 가격 시그널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 유도
- 기존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GVC 참여도 높은 에너지 다소비 소재산업 부문 공정혁신 지원 등)
- 탄소저감 분야(배터리, 수소 선박 등)의 신생 산업 투자, 적정 녹색 분류체계 확립
- 불공평한 저탄소 전환 영향 최소화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13

02 4.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 혁신과 규제의 조화: 공공서비스 플랫폼, 핵심 인프라 투자, 플랫폼 규제, 디지털 자산 관리

공공 서비스 플랫폼

-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와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
-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플랫폼 구축은 기업, 시민(소비자), 행정기관 등의 참여자에 대한 일방적 서비스 지원을 넘어, **참여자 협업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을 요구
- 사회의 주요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 기술 혁신, 환경 문제 등을 **상호 연계한 해결 솔루션** 개발

핵심 인프라

-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외부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장기적 투자를 보완
- 위험이 큰 핵심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dynamism을 높이는 것**이 미래형 정부와 공공 부문의 역할
- **미래형 일자리 창출 및 전환과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 노동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플랫폼의 혁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법 필요
- 플랫폼 등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주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과 이것을 배분되는 과정은 전통 독점기업 (예: US Steel)과 크게 다르므로 **차별적 접근법** 필요

디지털 자산 관리

- 데이터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통제** 필요
- 디지털 무형자산 산출·활용 비즈니스 생태계 규명, 구조적 특징과 연관관계 파악, 시대별 양상 추적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방향 전망 및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

14

02 5. 불평등 심화

▮ 분배 중립적 위기대응: 위기대응체계의 개편, 복지정책 강화, 재정구조 개혁

분배 중립적 위기대응

- 코로나19 대응으로 나타난 가계부채의 확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불안요인
- 최근의 인플레이션 확대도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금리인상 기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기반이 약화된 취약부문을 지원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중개자금지원 등 선별적 통화정책을 고민할 필요
- 향후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위기 대응 거시경제정책 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수 있을 것

복지정책

- 코로나19로 확대된 소득불평등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약화
- 향후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
- 향후 재정정책은 복지정책 강화 등을 통해 소득불균형 완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
- 다만 향후 고령화로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이 있어 세입세출구조 정비, 세율조정 등 국가재정구조의 중장기적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필요

세션 II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5대 분야를 중심으로

| | |
|-------|--|
| 발 표 | 기술패권시대의 산업·통상정책: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전략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
|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 방향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 |
| | 급격한 인구고령화 시대의 인적자원 정책 방향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 | 거점형 지역발전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
| |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 Q & A | 대국민 질의응답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Contents

- A 산업정책 부활
- B 주요국 산업정책 추진 현황
- C 한국의 산업정책 추진 현황
- D 글로벌 산업정책 부활과 한국의 대응전략

Part-A 산업정책 부활

01 산업정책 의의

특정 제조업 분야를 선택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 산업정책 개념

| | | 주요 논리 |
|----|------------------------------|--|
| 정의 | 협의 산업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제조업 분야를 선택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 “국제경쟁력 강화(효율성 제고) 혹은 경제력집중 완화(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원 혹은 규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특정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조동성, 1994) |
| | 광의 산업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의 배분과 축적, 그리고 기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 (학습, 산업 및 기술 정책(LIT Policy: learning, industrial and technology policy))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의 향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나 경제활동의 구조 변화를 위한 모든 유형의 정부의 개입과 정부 정책(OECD, 2013) |
| 구분 | 수평적 산업정책 (Horizontal Policy) | ·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제조업 또는 기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 |
| | 수직적 산업정책 (vertical Policy) | · 특정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에 영향(selective policy, vertical policy) |

자료: 산은조사월보(2019), “독일의 산업정책과 KfW의 역할”

01 산업정책 의의

개발도상국에서 강조되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관심 부각



영국 보호무역

- 17세기 모직물 보호 목적
- 인도로 부터 면직물(캘리코) 수입억제



독일 영국으로부터 기술 도입

- 영국의 기계수출제한법
- 몰래 도면 제작, reverse engineering, 전문기술자 초빙



미국 제조업 육성

- 제조업 보고서(ON THE SUBJECT OF MANUFACTURES, 알렉산더 해밀턴(1791))

시기별 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리

1940년대 ~ 1960년대

- 경제발전을 위해서 산업화가 필요
- 시장 실패가 산업화를 방해
- 시장 실패는 개발도상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 유치산업 보호 등을 위해 산업정책 필요

1970년대 ~ 1990년대

- 정부 실패가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함
- 자유무역과 민영화가 투자와 경제안정을 가져옴
- 정부개입의 최소화가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기여
- 워싱턴 컨센서스 확산

2000년~ 2010년대 중반

-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 둘 다 인정
- 산업정책을 어떻게 운용 하느냐가 중요
- 산업정책 운용의 유연성이 중요
- 혁신과 기술의 진보가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
- 국가적 혁신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 산업정책의 중요 과제

5

02 산업정책 부활 요인

중국 부상 + D^{cube}(Deglobalization, 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 공급망 교란 → 기술주권 & 경제안보 → 산업정책 부활

산업정책 부활에 관한 학계 의견

Journal of Industry, Competition and Trade (2020) 20:189–207
https://doi.org/10.1007/s10842-019-00322-3

Rebirth of Industrial Policy and an Agend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Karl Aiginger^{1,2} · Dani Rodrik³

Received: 24 September 2019 / Revised: 9 October 2019
Accepted: 7 December 2019 / Published online: 6 January 2020
©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LLC, part of Springer Nature 2020

JEL Codes L10 · N60 · O25 · Q50

1 The Rebirth of Industrial Policy: Reasons and Open Questions

After a period of decline in interest and premature predictions of demise, industrial policy is back on the scene. A variety of trends have contributed to the renewed interest. In the developing world, there has been a pushback against the market-fundamentalist approach, typically associated with the Washington Consensus. Even when growth rates have been high, economies in Sub-Saharan Africa and Latin America have experienced unsatisfactory rates of productive transformation and shortfalls in generating quality jobs in manufacturing or modern services. This has created a demand for proactive government policies to diversify and upgrade economies beyond simply freeing up markets. In the advanced economies, generalized labor market malaise and the lingering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have produced similar effects. Low growth dynamics occurred especially in the euro zone, as countries with trade and budget double deficits with a common currency struggled to come out of the crisis. The continuing decline in the employment shares of manufacturing in the USA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he increasing competitive threat posed by China on world markets have pushed in the same direction.¹ Interest in

자료: Aiginger and Rodrik(2020)

산업정책 부활 관련 해외 언론 기사



FINANCIAL TIMES

HOME WORLD US COMPANIES TECH MARKETS CLIMATE OPINION WORK & CAREERS LIFE & ARTS HOW TO SPEND IT

Opinion Free Lunch

What is industrial policy for?

Industrial policy is back in vogue in rich countries. For a good example of its revival in US politics, [watch the discussion](#) my colleague Rana Foroohar had with Brian Deese, director of President Joe Biden's National Economic Council, a few weeks ago.

The motivations tend to be compound, sometimes conflicting, and potentially confused. Industrial policy, at least when taken to mean boosting domestic manufacturing capacity, could aim at any of the following: to maintain a technological leading edge; to increase the number of factory jobs in the hope of helping left-behind people and places; to overcome productivity stagnation; to safeguard sufficient medical and other critical supplies in emergencies; or to concentrate supply chains within one's jurisdiction for geopolitical rea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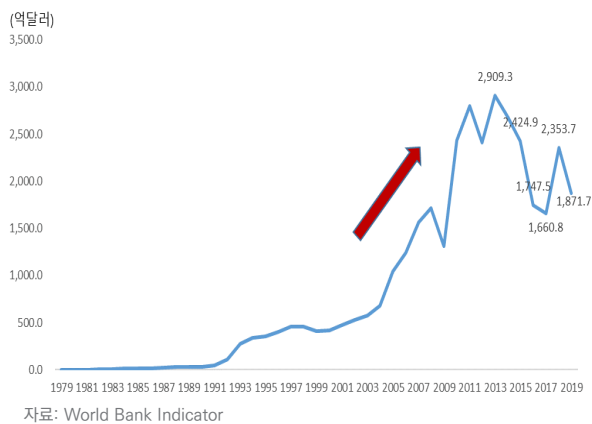
자료: Financial Times(2021.7.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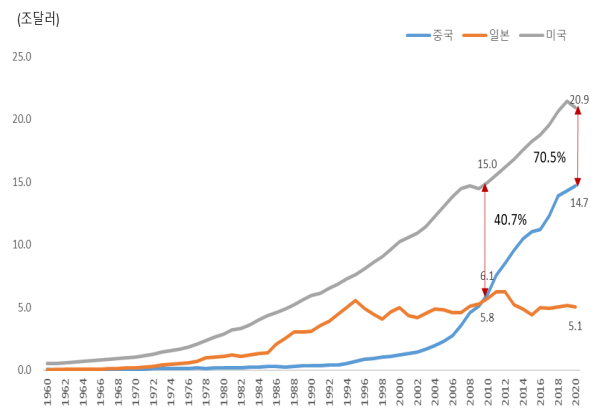
02 산업정책 부활 요인: 중국의 부상과 기술패권 경쟁

| 중국의 개방 이후 선진국은 중국의 낮은 생산비용 및 시장 규모 이점 활용
 | 중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영향력 강화(2010년 중국 G2) →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

대중국 해외 직접 투자 추이



미국, 일본, 중국 경제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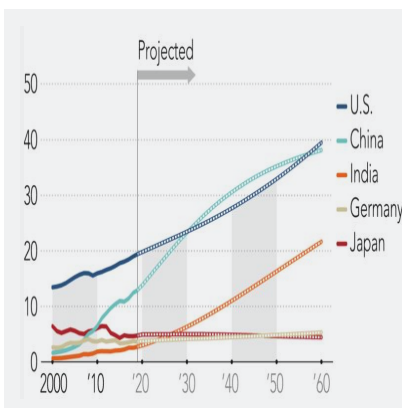


02 산업정책 부활 요인: 중국의 부상과 기술패권 경쟁<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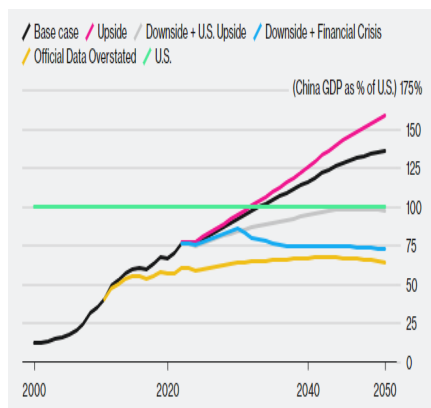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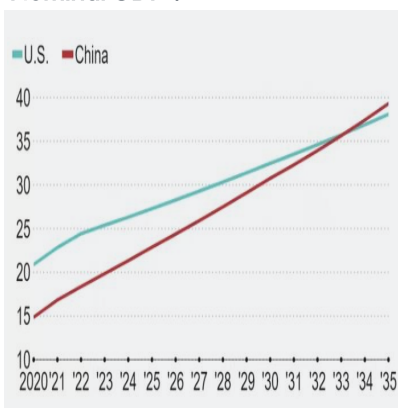
| 중국의 미국 경제 규모 추월 :
 2030년 (2060년 미국이 중국 재추월) → 2033년 지연 → 추월 어려움(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중국의 미국경제 규모 추월 전망

GDP (in trillions of dollars)



Nominal GDP (in trillions of dollars)



자료: 일본경제연구센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2021.7.6)

02 산업정책 부활 요인: 중국의 부상과 기술패권 경쟁

| 중국의 첨단 기술 및 제조업 자립 추진(예: 2015년 『중국 제조 2025』): **선진국 첨단기술 보호 및 각국 첨단기술 확보 경쟁 촉발**

| 주요국 첨단기술 선정 현황

| 미국 | | 중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머신러닝 고성능 컴퓨터 하드웨어·반도체 퀀텀 컴퓨팅 로봇·자동화 첨단 제조 자연재해 예방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통신 바이오·의료 사이버 보안 데이터 관리 첨단 에너지 배터리 첨단 소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양자 정보기술 뇌과학 집적 회로 유전자 및 바이오 임상의학·헬스케어 우주·심해·극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소재 중대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항공기 엔진 베이더우(BDS) 신에너지·스마트 카 첨단 의료 장비·신약 농업 기계 |
| EU | 독일 | 일본 | 호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 배터리 바이오 제약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기술 2세대 양자 정보 기술 재료 기술 바이오 공학 제조 기술 환경 기술 지속가능 에너지 기술 분석 측정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재료 포스트 5G 슈퍼컴퓨터 양자 정보 기술 우주 에너지 및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 소재 유전 기술 신경학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로봇 컴퓨팅 화학 우주 사이버 기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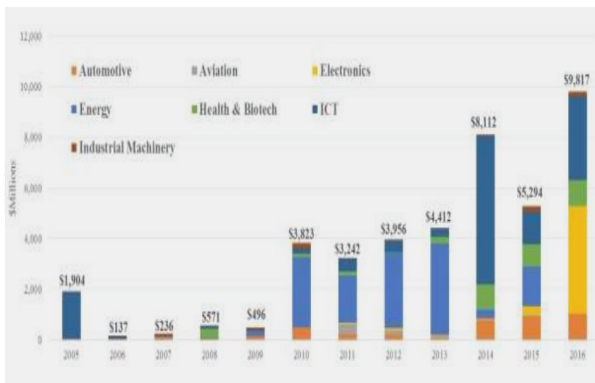
자료: 미국의 USICA, 중국 14차 5개년, EU 산업업 전략, 일본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호주 국가전략기술, 백서인(2021) 재인용

9

02 산업정책 부활 요인: 중국의 부상과 기술패권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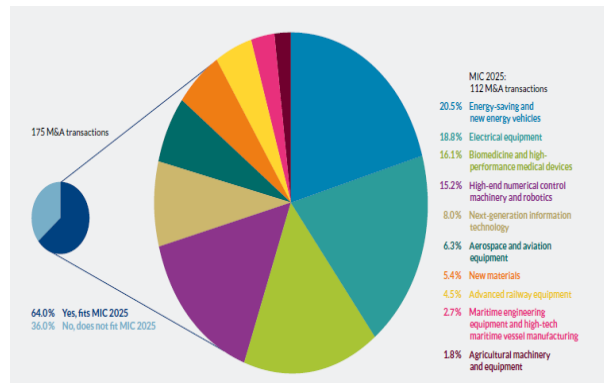
| 중국의 첨단 기술 및 제조업 자립 추진(예: 2015년 『중국 제조 2025』): **선진국 첨단기술 보호 및 각국 첨단기술 확보 경쟁 촉발**

산업별 중국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USTR(2018),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관련 독일기업 M&A 현황



주 : 2014~2017년 기준
 자료 : Bertelsmann Stiftung(2018), "Is China Systematically Buying Up Key Technologies?"

10

02 산업정책 부활 요인: 디지털 전환 → 반도체 산업 핵심 전략 산업

| 반도체 기술(semiconductor technologies) 및 제품(application) 디지털 전환 및 그린 전환의 핵심 요소

주요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미국

미국 CHIPS 법
(동 내용 포함된
America COMPETES Act,
2022.2.4 하원 통과)



유럽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HIPS
법안 발표
(2022.2.8)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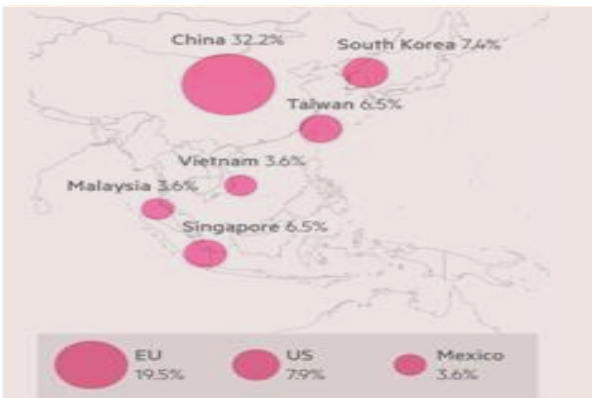
반도체 및
디지털 산업전략
발표
(2021.6)

자료: 각국 정부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02 산업정책 부활 요인: 핵심 전략 산업 자국 및 우방국내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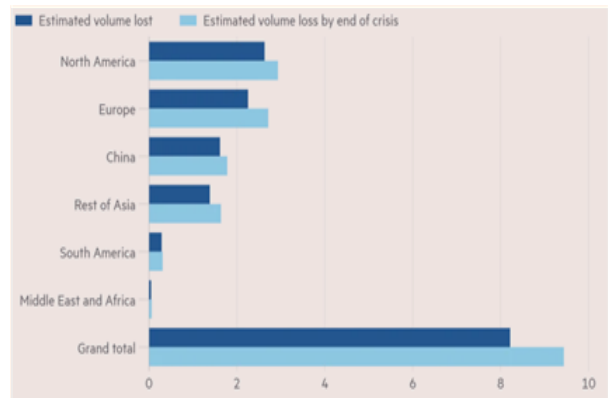
| 핵심 산업의 대외 의존은 경제 전략적 측면에서 심각한 취약성 초래 → 경제안보 중시 (economic security)

통신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



주: 수출 기준
자료: Financial Times, 2018.9.3., "US-China trade war prompts rethink on supply chains"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판매 손실



자료: AutoFocast Solutions, Financial Times 2021.9.14., "Chip shortage drags on as plant closures hit carmakers"에서 재인용

02 산업정책 부활 요인: 탄소중립 → 산업·통상 전략

|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차원을 넘어 무역장벽으로 활용

주요국 NDC 목표(상) 및 주요 해외기업 탄소중립 선언 현황(하)

| 국가 | 2030 NDC 목표 주요 내용 | |
|----|--------------------|--|
| EU |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 |
| 영국 | 1990년 대비 68% 감축 | |
| 미국 | 2005년 대비 50~52% 감축 | |
| 일본 | 2013년 대비 46% 감축 | |
| 한국 | 2018년 대비 46% 감축 | |

| 기업 | 넷제로 | 탄소저감 계획 |
|----|-----|-------------------------------------|
| MS | 50년 | 10억달러 규모 기후혁신기금 조성 |
| 구글 | 30년 |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70억달러 투자 |
| 애플 | 30년 | 100% 재생에너지 도입 |
| BP | 50년 | 재식림 사업과 CCS 기술기반 탄소저감 및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 |
| 셸 | 50년 | 총 30억달러 투자 계획 |
| 토탈 | 50년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자료: 화학·바이오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1.11.30)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품목

| | EU집행위원회 입법안 (2021.7) | EU의회 수정안 (2021.12) |
|--------------|----------------------------------|---|
| 적용품목 | 철강, 전락,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 철강, 전락,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
| 도입시기 | 시범적용 : 23.1~25.12 본 제도 : 26.1 | 시범적용 : 23.1~24.12 본 제도 : 25.1 |
| 무상할당권 | 26년 이후 10년간 10%씩 감축 | 25년 이후 4년간 10%, 20%, 30%, 40%씩 감축 |
| 배출범위 | 직접배출만 포함 | 간접배출까지 포함 |
| 역외국 탄소가격제 인정 | 별도 조건 없음 | 명시적 탄소가격제만 인정 |
| 거버넌스 | 27개 회원국 각각에 집행기구 설치 | 중앙화된 집행기구 설치 |

자료: 신규섭(2022),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Part-B

주요국 산업정책 추진 현황

01 주요국 산업정책 추진 현황

| 중국은 첨단기술 자립, 유럽은 첨단산업 육성, 미국은 첨단제조 산업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산업정책(전략) 추진
| 주요국 산업정책 추진 현황

| | | | |
|--------|--|-------------|---|
| 중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제조 2025(2015) | E 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산업전략 (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2020.3) 유럽산업전략 (Updating the 2020 New Industrial Strategy, 2021.5)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산업정책의 신기축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도전, 2021.6) 경제안전보장 촉진 법안(2022.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전략 발표 (Industrial Strategy White Paper, 2017.11) 녹색산업혁명 (Green Industrial Revolution, 2020.10) 레벨업 (Levelling Up the United Kingdom, 2022.2.2) 국가안보투자법(2022.1) |
| 미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부흥정책(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2009) MIT대 생산과 혁신 테스크 포스 신설(2012) 미국 제조혁신 부흥법 제정(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 2014) 국가첨단제조 전략 추진(Strat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2018.10) 공급망 점검(America's supply Chains, 2021.6 및 2022.2) 반도체 지원법(Chips 법 포함 America COMPETES Act, 2022.2.4 하원 통과) | 프 랑 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테크 전략 (2006, 2010, 2014, 2018) 독일 제조 2030 - 국가 산업 전략 2030(2019) 프랑스 2030(2021.10) |

자료: 저자 작성

15

02 주요국 산업정책 추진 현황: 독일 사례

| 독일: 특정 산업 및 기업 육성 정책 시도, 반대 의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개선에 초점

| 독일 제조 2030 주요내용

| 독일 제조 2030 초안(2019.2)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 및 기술주권은 독일 경쟁력 유지 핵심 2.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3% → 25% 상향 3. 폐쇄형 공급망 구축 (기획 → R&D → 생산 전공급망 독일내 구축) 4. 비교우위 산업경쟁력 유지 및 저경쟁력 산업경쟁력 확보 5.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중소기업(SME) 한계 (디지털전환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6. 국가 대표 글로벌 기업 육성 7. 해외의 독일 전략 산업관련 기업 인수 방지 |

| 독일 제조 2030 수정안(2019.11)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허브 지속 위한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개선, 사회안정보장 기여 40% 이내 • 유연한 노동시장, 직업훈련 강화 • 에너지(전기) 가격 경쟁력 확보 • 인프라 확충 •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순환경제 진전 • 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2. 신기술 강화 및 민간자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수소, 신소재, 탄소 저감 및 포집, 바이오경제, 경량 건축 기술 등 신기술 확보 •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혁신자금 적극 활용 • AI 전략, 유럽 데이터 인프라 등 활용 디지털 전환 기회로 활용 3. 기술주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기업의 국가 전략기술 보유 기업 인수 시도시 민간의 백기사 또는 정책금융(KfW)을 활용하여 인수 제지 • 사이버 공격 방지를 통해 기술주권 보호 |

주: 붉은색 부분은 독일내 강한 반대 의견, 자료: 스웨덴 기업가정신 포럼(2021), "Swedish Perspective on Industrial Policy: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Beyond"

16

03 주요국 산업정책 추진 현황: 미국 사례

I 미국 공급망 보고서 및 반도체 지원법 주요 내용

| 공급망 보고서 | |
|-------------------|--|
| 2021.6 (4개 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및 첨단패키징(상무부) 고용량 배터리(에너지부) 핵심 광물 및 원자재(국방부)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보건부) |
| 2022.2 (6개 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에너지부) 교통(교통부) 농산품 및 식료품(농업부) 의료업(보건부) 통신업(상무부, 국가안전부) 국방산업(국방부) |
| 정책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생산 및 혁신역량 제고 정책금융 역할 강화 인재 육성 시장장출 및 핵심제품 투자자로서 정부의 조달 역할 강화 국제 통상 규칙 및 준수 기제 강화 공급망 취약성 완화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

| 반도체 지원법(CHIPS)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내 반도체 연구, 디자인, 제조에 연방정부 520억달러 지원 반도체 장비, 시설 투자 등에 20~40% 세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첨단 장비 도입, 공조 시설, 오염 방지 시설 투자 등 반도체 장비 역량 고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나노 칩 생산용 측정 장비 고도화 지원 반도체 장비 가상화 및 자동화 지원 국방부: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 개발 지원 상무부: 국방생산법의 국방 지원을 위한 산업 기반 평가 조항을 활용 반도체 공급망 및 반도체 제조·설계의 국제 상호 의존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미국내 자국 반도체 기업 및 해외 반도체 기업 내용: 영업 대상, 비용 등 12개 항목 마이크로 전자 개발 및 관련 공급망 구축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 및 디자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에 반도체 기술 및 혁신 특별위원회 신설 상무부내 첨단 패키징 및 제조 연구원 신설: 2021년 예산 50억달러 국립 반도체 기술 센터 설립: 2021년 예산 30억달러 DARPA내 전자부흥 프로그램 신설: 2021년 예산 20억달러 국가과학재단내 반도체 기초 연구 기금 신설: 2021년 예산 30억달러 에너지부내 반도체 기초 연구 기금 신설: 2021년 예산 20억달러 | |

주: 미국 행정 명령 14017(2021.2), 100일 공급망 보고서(2021.6), 공급망 보고서 1년 추진 성과(2022.2), 혁신경쟁법 참고 저자 정리

Part-C

한국의 산업정책 추진 현황

01 한국 산업정책 추진 현황: 경쟁력 강화 → 첨단 산업 발전 전략

| 워싱턴 컨센서스 체제 및 주력산업 구조 감안
2010년대 중하반기 산업경쟁력 강화, 최근 첨단산업 발전 전략 추진
| 한국 산업정책 추이

| | 90년대~참여정부 | MB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
| 경쟁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8대 주력 기간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대책(02.07)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02.06) 금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96.05)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95.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대책(11.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17.03)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16.10)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16.09)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6.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22.03)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12) |
| 발전 전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10.08) 생명 산업 2020 발전전략(1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가스 산업 발전 전략(15.12) 데이터 산업 발전전략(14.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K-배터리 발전 전략(21.07)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종합 발전 전략(21.02)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20.1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18.12)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18.06) |

자료: 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9

02 한국 신기술·신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정책

| 각 정부 신기술 및 신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정책 추진, 최근 신성장 산업(예: 이차전지, 바이오) 기술 개발 → 산업화 20년

| 한국 신기술 및 신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정책 추이

| 참여정부 | MB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T IT, BT: 생명공학기술, NT: 나노기술, ET: 환경기술, ST: 항공기술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디지털 TV,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홈,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전지, 바이오 신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산업, LED 응용, 그린 수소 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 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바이오제약,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 관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산업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항공기 시스템, 해양플랜트, 첨단소재 가공, 국민 안전, 건강 로봇 에너지 산업 고효율 발전시스템, 저손실 송배전시스템 소재부품산업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창의산업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나노기반 생체모사, 가상훈련 플랫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NA (데이터·AI, 5G)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송 (전기·수소 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스마트해양플랜트) 건강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 스마트 의료기기) 생활 (스마트홈, 서비스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래형 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에너지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 효율 향상,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제조 (첨단소재, 첨단 제조공정, 차세대반도체, 스마트산업기계,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

자료: 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

Part-D

글로벌 산업정책 부활과
한국의 대응전략

01 한국의 산업구조

| 주력 제조업: 고도화·탄소중립, 신성장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Emergent 산업(기술):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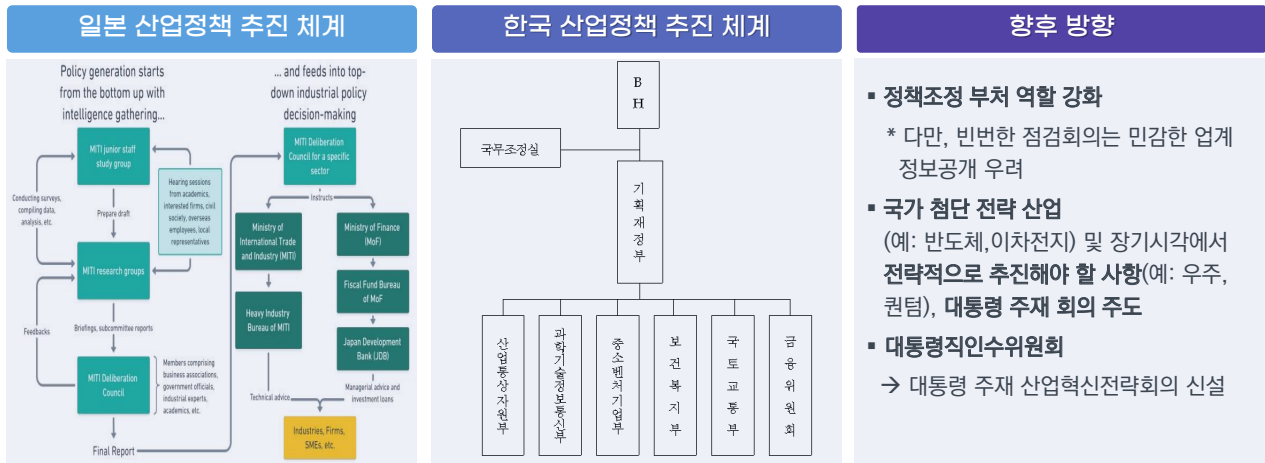
| 한국 산업별 특징 및 도전과제

| | 주력 제조업 | 신성장 산업 | Emergent 산업(기술) |
|---------|--|---|---|
| 산업 및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 세계 5위 ▪ 반도체 : 메모리 세계 1위 ▪ 철강 : 세계 6위 ▪ 석유화학 : 세계 4위 ▪ 조선 : 세계 1~2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 세계 2위 ▪ 시스템반도체 ▪ 전기차·수소차 : 전기차 세계 5위, 수소차 세계 1위 ▪ 바이오 : 세계시장 1,446조원, 한국 23조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우주 : 세계시장 454조원, 한국 3.9조원 ▪ 퀀텀 컴퓨팅 등 |
| 도전 과제 | 고도화·탄소중립 대응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술경쟁력 확보 |

자료: 저자 작성

02 한국의 산업 전략 추진 방향: 정책 조정(Coordination) 체계

일본: 경제산업성 상향식·하향식 조화(영국정부 평가), 총리 총괄: 한국도 체계 유사 정책조정부처 제한적 역할, BH 현안 중심



자료: Ohno(2018), "The History of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Origins of Private Dynamism and Policy Competence", Coyle and Muhtar(2021) 재인용

주: BIG3 정책 추진 체계
자료: 저자 작성

자료: 저자 작성

02 한국의 산업 전략 추진 방향: 첨단 제조 육성 및 첨단기술 확보

미국 정부: 국내 제조업 확보는 혁신 역량의 핵심 기제로 인식, 첨단 제조업 육성 적극 추진 (예: 반도체 지원법)
한국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법 제정, 첨단산업 시설 기반 인프라 지원 중요 (예: 부지, 전기, 도로, 수도)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법 주요 내용 | 미국 정부 선정 첨단전략 기술 및 당선인 공약 선정 첨단기술 | 주요 정책 수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산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설치 ▪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 패키지로 지원. ▪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 ▪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한 특례 마련 ▪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 지원, ▪ '전략산업융합교육센터' 구축 실무 역량 향상 ▪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 지원 ▪ 연구개발, 생산활동 등과 관련된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결과 회신 ▪ 기술 수출·M&A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머신러닝 관련 소프트웨어 고도화 ▪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및 고성능 컴퓨터 하드웨어 ▪ 쿼텀 컴퓨팅 및 관련 정보 시스템 ▪ 로보틱스, 자동화 및 첨단 제조 ▪ 자연재해 예방 ▪ 첨단 통신 기술 ▪ 바이오 기술, 의료 기술, 유전학 및 합성바이오 ▪ 사이버 보안, 데이터 저장, 데이터 관리 기술 ▪ 첨단 에너지, 배터리 ▪ 첨단 소재, 엔지니어링 및 탐사 관련 기술 <p>[참고] 당선인 공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헬스, 항공우주, 탄소중립(차세대 원전), 양자(Quantum), AI 반도체·로봇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 ▪ 금융 ▪ R&D ▪ 인재육성 ▪ 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확보 · 해외 FDI ▪ 에너지 |

자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법

자료 : 미국 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

자료 : 저자 작성

03 한국의 산업 전략 정책 수단별 역할 방향: 세제·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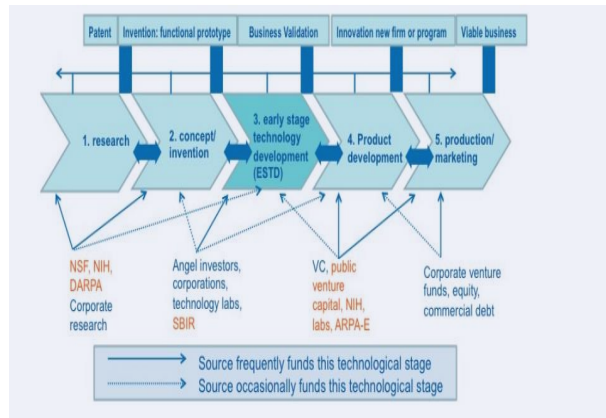
| 주력 산업 고도화 및 탄소중립 대응, 첨단 산업: 대규모 투자 필요 → 기업의 R&D 및 설비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 확대
| 금융: 정부(정책금융)가 첨단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감당하는 가운데 민간의 기업금융 역할 촉진

미국 반도체 증진법안 주요 내용

- 배경**
- 반도체는 ICT 제품, 자동차, 국방 기술의 핵심 요소
 - 미국은 반도체 중주국이었으나 최근 해외 생산 의존도 심화(1990년 37% → 12%)
 - 반도체 생산의 75%를 동아시아에서 생산
 - 미국과의 생산비 격차의 70%는 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우위 보다는 보조금에 의해 발생
 -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망 교란은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
 - 국내 반도체 제조 지원을 위해 합리적이고 표적 인센티브를 초당적으 마련
- 제안**
- 반도체 장비 및 공장 신설에 25% 세제 지원

자료: The Facilitating American-Built Semiconductors (FABS) Act

혁신의 사업화 과정과 금융의 역할(미국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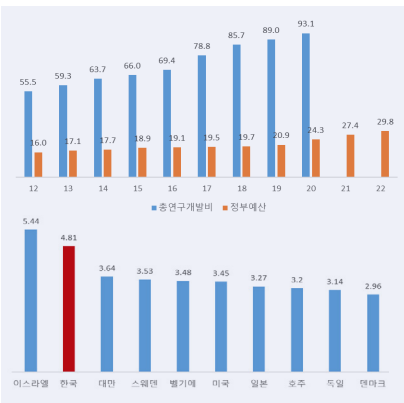


자료: 독일 신경제 포럼(2020), "Challenge-driven economic policy: A new framework for Germany"

03 한국의 산업 전략 정책 수단별 역할 방향: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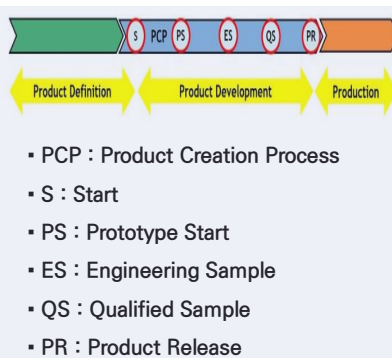
| 제조공정(Manufacturing Process) R&D 중요, 해외와 R&D 협력 강화
(예: 미국 화이자 + 독일 바이오엔테크(MRNA) → 백신 개발)
[참고] 당선인 공약: R&D 질적 성장 및 민간투자 2배 증가 유도

R&D 규모(상) 및 GDP 대비 비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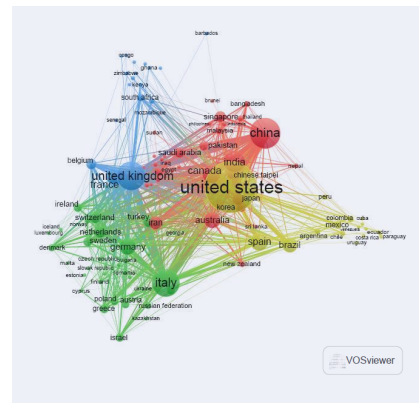
주: 조원, %, 자료: 과학기술통계

제조공정 R&D 과정



자료: <https://www.maximus-randd.com/rd-processes.html>, 2022.4.7 접속

코로나 19 백신 연구 국제 협력



자료: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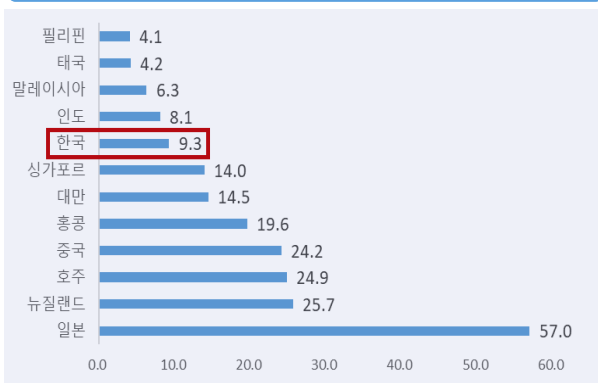
03 한국의 산업 전략 정책 수단별 역할 방향: 인재

| 글로벌 인재 육성 및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Global Brain Network) 강화

(화이자 CEO : 그리스 출신, 바이오엔테크 : 터키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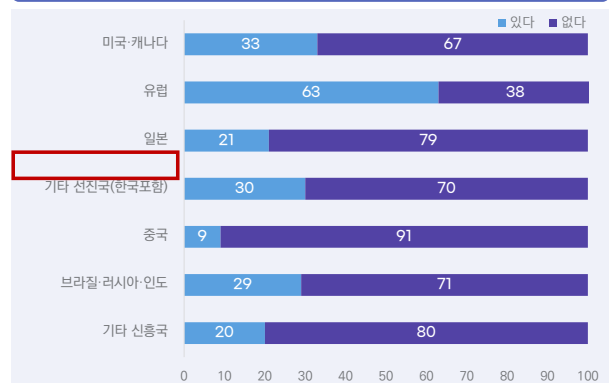
[참고] 당선인 공약: 디지털 인재 100만명, 반도체 기술인력 10만명 등 육성

자국에서만 일하고 싶다는 응답 비중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2022), 글로벌 사회 실현

CEO의 글로벌 경험(2018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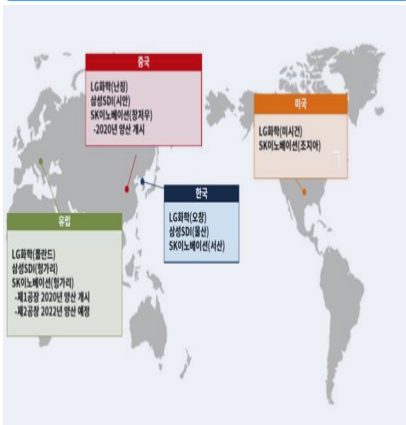
자료: Strategy&, 2018년 CEO 승계조사

03 한국의 산업 전략 정책 수단별 역할 방향: 통상

|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확대 지원 및 해외자원 확보, 지정학적(geopolitical)·지경학적(geo-economic) 질서 재편 전략적 대응

[참고] 당선인 공약: 기술우방국과 협력 강화, 국무총리실 산하 신항안보위원회 신설, 민간 중심 해외자원 확보

국내 배터리 3사 전기차용 배터리 해외 생산 기지 현황



자료: 뉴데일리경제, 2021.1.4일자

대 미국 FDI 추이



주: 역달러,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3.23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정책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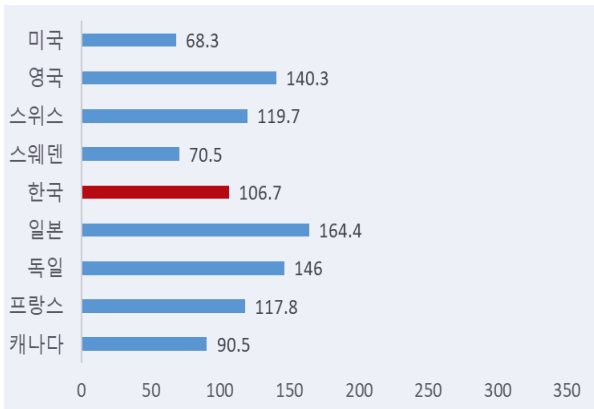
- 첨단제품의 중국 및 지정학적 경쟁국 의존도 감소 위해 자국 및 우방국 생산 (friend-shoring) 추진
- 공급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우방국 및 파트너와 협력 강화(예: 반도체 및 배터리 해외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발표)
- 미국-유럽 통상기술위원회 산하 공급망 워킹 그룹 신설
-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공급망 협력 강화
- 희토류 국내 공급망 구축 위한 투자
- 연방 핵심 광물 리스트 점검
- 광산 법 및 규제 개편
- 핵심 전략 물자 비축 강화

자료: 공급망 보고서 1년 추진 성과(2022.2),

03 한국의 산업 전략 정책 수단별 역할 방향: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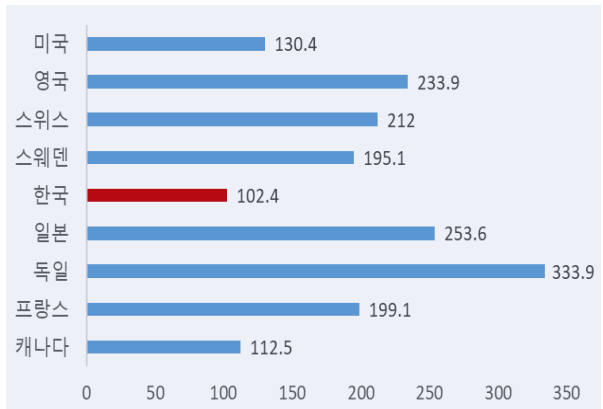
| 에너지 가격 경쟁력 제고: 에너지 가격은 탄소 중립 및 디지털 전환 위한 핵심 요소
[참고] 당선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산업용 전기 요금 국제 비교(2019년 기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2022), 그린 사회 실현

가정용 전기 요금 국제 비교(2019년 기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2022), 그린 사회 실현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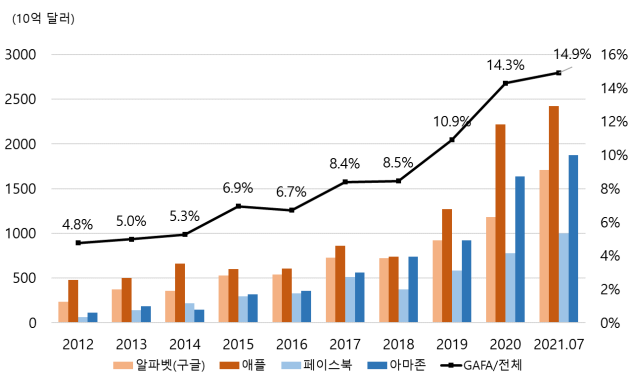
디지털 플랫폼 경제 쟁점과 정책 방향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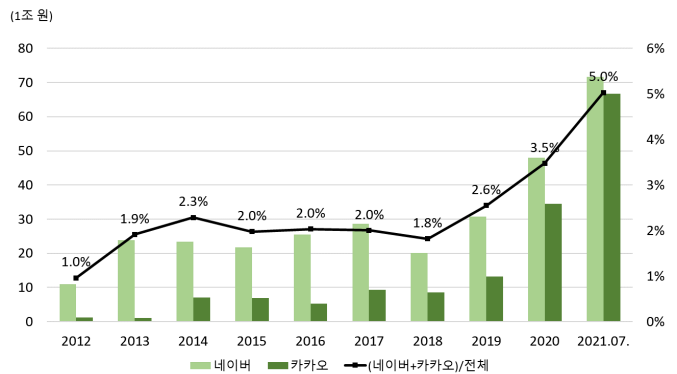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

<구글, 애플, 페이스북(메타), 아마존의 성장>



1) 막대: 각 플랫폼 기업의 시가총액(좌, \$1B)
 2) 선: 미국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 대비 GAF4 시가총액 합 의 비중(우, %)
 3) 자료: Bloomberg

<네이버, 카카오의 성장>



1) 막대: 각 플랫폼 기업의 시가총액(좌, 1조원)
 2) 선: 국내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 대비 네이버/카카오 시가총액 합 의 비중(우, %)
 3) 자료: KRX data system (<http://data.krx.co.kr/>)

플랫폼 경제 확산 관련 정책과제

01 디지털 플랫폼
규율을 위한
경쟁정책 재정비

02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에 대응

03 데이터
정책 설계 및
추진

04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합에
따른 새로운 규제
체계 설계

05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이해와 보호

06 디지털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01 디지털 플랫폼 규율을 위한 경쟁정책 재정비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플랫폼 경쟁정책 설계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
경쟁정책적 이슈 부상



- Matchmaker 뿐 아니라 rulemaker +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존도 높음.
- (지배적) 플랫폼 관련 쟁점: 경쟁자/잠재적경쟁자 배제, 착취적 행위, 진입장벽으로서의 데이터
 - 기존 경쟁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예: 약탈적 가격설정) 새로운 유형(예: 검색 알고리즘을 통한 자사우대)
 - 기존 기업결합 심사기준으로 놓치기 쉬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킬러합병, 수직결합/혼합결합 증가)
- 기존의 (사후적, case-by-case) 경쟁정책 집행이 충분하지 않았고, 신속하지 않으며, 플랫폼 경제에 대응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

경쟁정책 재정비 방안을 고민하되, 해외의 급진적인 입법 움직임을 추종하기보다는 점진적 조절

- (구조적·행태적) 사전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기본방향은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이 적절
- 현행 경쟁법 규율체계의 큰 틀 안에서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속한 법집행 방향 고민에 집중
-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해외 모니터링과 함께 다양한 조치수단 검토, 필요시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02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에 대한 대응 - 라이선스 산업을 중심으로

공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

시장확장 효과 + 기존사업자 대체

- 라이선스 산업에서는 특히 장기적 효율성 달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플랫폼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며 매칭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라이선스의 경제적/사회적 정당성(위생/안전/일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 보장)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규제차익 우려

라이선스가 보호하고자하는 공익이 디지털 플랫폼 거래에서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사전적 진입규제보다는 폐해를 줄이며 시장진입을 활성화하는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

- 기존의 중개 매체와 새로운 매개체로서의 플랫폼 간의 충돌: 중개 역할에 규제가 필요?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예. 로톡
- 오프라인 대 온라인 공급자 간의 비대칭적 규제: 규제차익? 공유경제의 예. 거래량연동규제

플랫폼이 기존 사업자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기능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혁신을 이끄는 역할도 수행함을 감안할 필요

5

03 데이터 정책 설계 및 추진

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보호 절충

방대한 양의,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여 적극 활용될 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경제는 활성화하는 것이 과제

데이터의 전 주기 활성화 (수집, 가공, 연계, 개방, 활용)

-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작업과, 이를 중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
- 데이터 이동과 호환성, 데이터 간 결합 촉진 (경쟁정책적으로도 의미)
- 데이터 제공/개방을 통한 수익창출 기회(유인 제공), 데이터 활용의 규제부담 완화
- 정보자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기본,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절

개인정보보호와 마이데이터 사업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절충안)

- 정부가 기업과 개인 사이의 중재자로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
- 2022년 1월 금융부문 시작 본격 시행. 의료, 통신, 교육 분야로 확대 추진중
-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유인책과 규제부담 완화가 필요

6

04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합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계 설계

플랫폼 경제의 혜택을 키울 수 있는 유연한 규제체계 설계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의 다각화

기존 산업의 전통적 규제방식에 변화가 요구됨

금융플랫폼의 예

- 현 금융규제는 업권(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별 영업 허용 범위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금융상품의 판매채널도 업권별 특성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원화된 규제
- 그러나 금융플랫폼이 의미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권을 넘어선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단일 플랫폼을 통해 비교 및 추천되고 거래될 필요. 이는 기존의 규제방식에 포섭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 거래 방식
- 금융혁신 촉진 + 금융규제 양대목표(금융시장 안전,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구축이 필요
 - 금융플랫폼 도입과 함께 금융상품의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업권별 규제보다는 행태별(생산과 판매) 규제가 적절할 수 있으므로 고민이 필요

05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이해와 보호

플랫폼 경제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보호의 범위와 형태 구상



플랫폼 취업 (platform work)
플랫폼 노동 (platform labor)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 인적 서비스가 중개/거래

-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디지털 전환+코로나 19 영향으로 향후 확대 예상
- 탐색과 정보 마찰(search and information frictions) 존재 노동시장에서 기존에 불가능하던 효율적인 매칭 가능
- 반면, 플랫폼의 효율성 추구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논의 중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의 창출을 막지 않으면서도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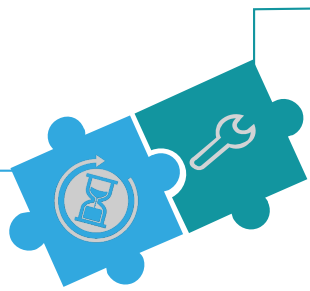
- 자율규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평판효과, 플랫폼 간 경쟁
- 공정거래정책: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규율
- 약한 노동법적 규제: 사회보험 가입, 노동조합 설립권리 등
- 강한 노동법적 규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
-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과 근로자성의 주요 판단기준인 전속성과 경제적 종속성 등은 플랫폼 간 경쟁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

06 디지털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실증적 증거 기반 논의

디지털 플랫폼이 콘텐츠 개발에 공헌하지 않지만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거래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거래위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때로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지적

- 과도한 수수료 논란 (배달앱, 앱스토어)
- 뉴스배치 (포털, SNS)
- 소비자보호 (가짜상품, 거짓후기) 등



플랫폼의 양면성과 자율규제의 작동 정도를 고려하여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결정

- 파편적 주장보다는 이론적, 실증적 증거 기반 논의가 필요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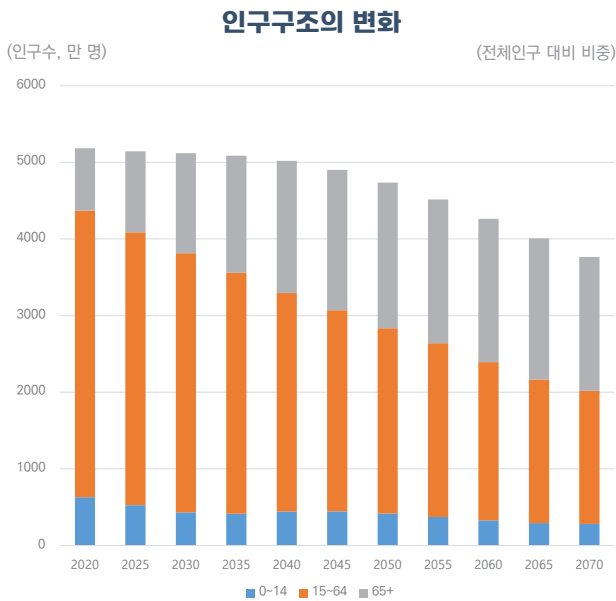


급격한 인구고령화 시대의 인적자원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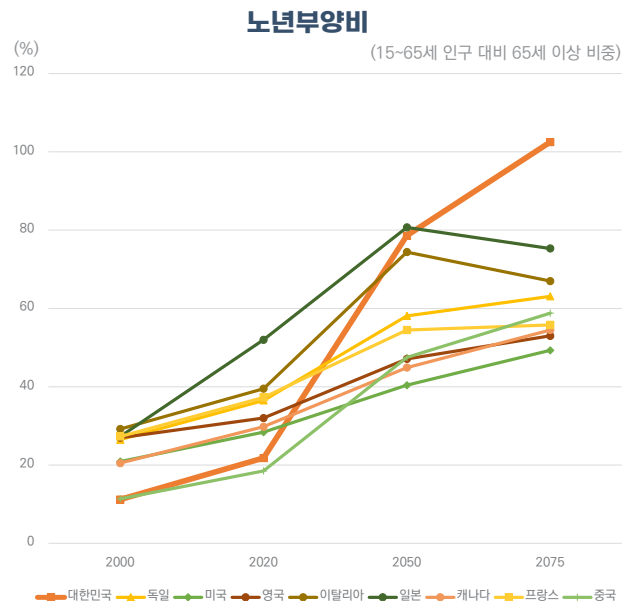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1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 2021



자료: OECD Data, 202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1

01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와 인적자원 정책

2050년까지 인구수는 대체로 유지되지만 65세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증가: (2020년) 21.8 → (2050년) 78.6 (생산가능인구 1인당 65세 이상 인구)
- 현재로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문제이지만, 2030년 이후로는 인력부족 문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당면한 과제: 고령인력 활용 - 세 가지 핵심과제

-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속을 연장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정년연장 내지 고용연장
- 청년 일자리 확보
-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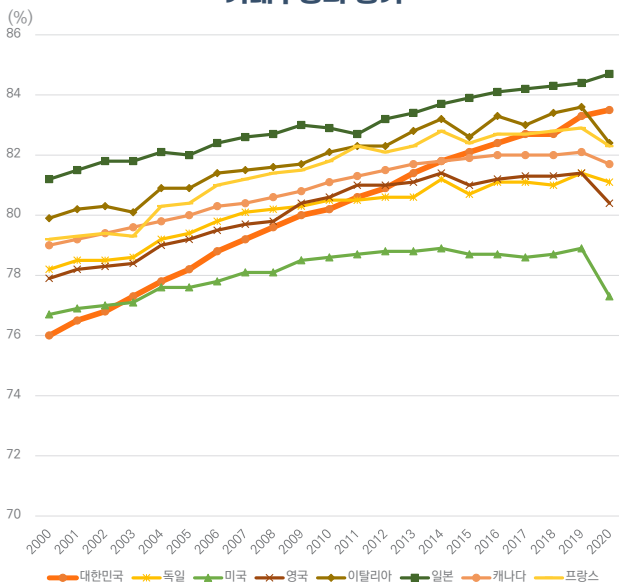
그 밖의 주요 인적자원 정책

- 출산장려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
- 이민 및 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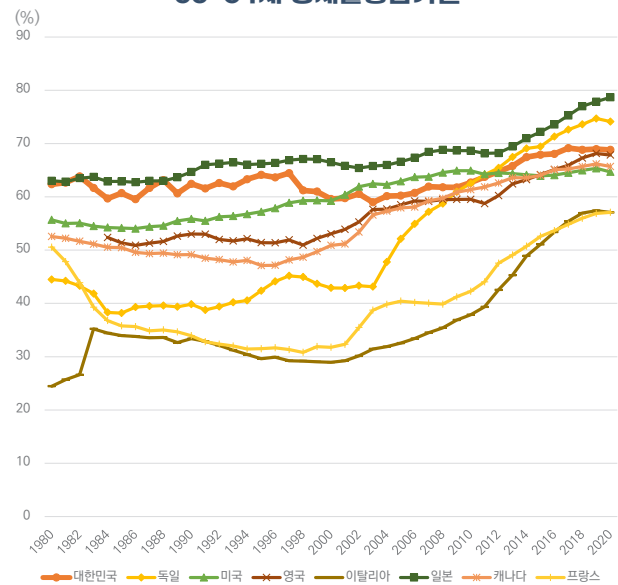
02 핵심과제: 고령인력 활용

기대수명의 증가



자료: OECD Data, 2021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 Data, 2021

4

02 핵심과제: 고령인력 활용

노동 공급 과잉

- 생애 주직장 퇴직: 대체로 50대
 - 정년 이전의 퇴직 비중 높음: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건강, 가족 사유 등
- 낮은 은퇴: 2020년 기준 유효은퇴연령은 만 73세
 - 국민연금 미성숙, 노후부모부양에 관한 인식 변화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미비
 -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58%) 노동시장 참여

노동 수요 부족

- 경직적 노동시장: 생애 주직장 퇴직 이후 재취업 어려움
 - 생애 주직장 퇴직 이후로 비정규직 비중 및 공식실업률과 확장실업률 증가
-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인 현실
 - 학력이나 기존 숙련과 무관한 저숙련 저임금 근로 위주의 고령층 노동수요
 -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및 연령에 의한 차별 가능성

노동시장 개입 필요성

- 생애 주직장에서 보다 오래 일하는 근로문화 형성
 - 점진적 정년연장 내지 고용연장은 중요한 정책수단
 -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도 중장년층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
- 연금 수급 이전의 소득공백 축소
 - 연금수급개시연령(2033년 65세)와 연금가입상한(만 60세 미만)와의 괴리 축소

5

02 핵심과제: 고령인력 활용 - 정년연장

|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한계

정부 개입을 통한 생애 주직장 근속 증가

- 법정 최소정년 증가 → 기업 단위 정년 증가(강제적 수요창출) → 생애 주직장 근속 증가? → 청년일자리?

지난 60세 정년 의무화의 사례 분석

-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고령층 근로자에게 고용연장 효과가 있었으나, 청년층 일자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소
- 정년연장의 폭이 큰 기업에서는 고령층 조기퇴직, 청년층 고용위축 등 부작용도 상당히 나타남.
-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청년층 고용은 오히려 증가

|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

“신중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

-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직무설계 및 새로운 보상체계 필요
- 세대간 상생을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

6

02 핵심과제: 고령인력 활용 - 고용연장

| 고용연장(재고용 의무화)

정부 개입을 통한 생애 주직장 근속 증가

- 정년 이후 일정 연령의 재고용 의무화(강제적 수요창출) → 생애 주직장 근속 증가? → 청년일자리?

일본의 사례

- 고령자고용확보조치 의무화 (2006~2013): 기업들은 재고용(약 80%),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선택
- 60~64세 고용률은 뚜렷이 증가: ('06) 52.6% → ('14) 60.7%
-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고령층 임금은 정년 이후 약 30% 하락 (*고령자고용계속급부제도)

| 일본 사례의 시사점

“흥미로운 사례로 심층논의 필요”

- 일본 노동시장 관행의 연장선
- 고령층 임금 하락에 대한 지원: 고령자고용계속급부제도
- 고령층 직무설계는 여전히 중요

7

03 핵심과제: 청년 일자리 확보

| 청년일자리 현황 및 전망

코로나 19의 영향

-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졸업생들의 경우 고용률 하락 충격이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 양적인 회복세와 달리 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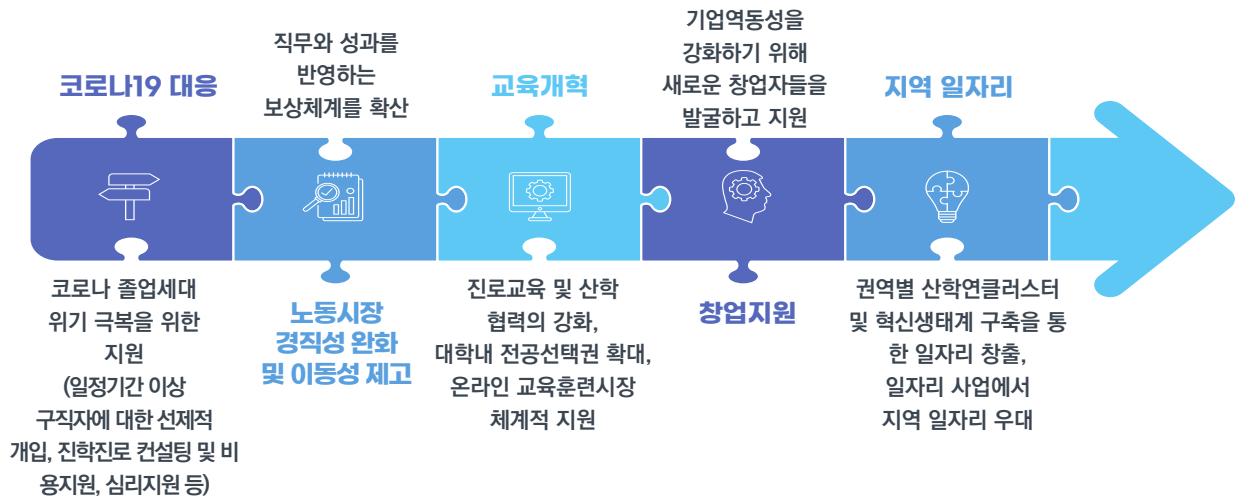
전반적인 추세는 **청년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이지만, 현재의 제도적 현실은 불확실성을 가져옴.**

- 인구 고령화 및 디지털 전환 추세 등은 청년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요인들임.
-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쉽게 완화되기 어려우며, 특히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계속하여 감소할 가능성
(대기업 대규모 공채 비중, 인크루트) ('19) 23.3% → ('20) 11.8% → ('21) 7.4%
- 또한 디지털 전환 추세와 관련해서도 진로교육이나 학교-직업세계간 연계성의 부족, 대학교육에서의 전공 선택의 경직성 등의 문제로 인해 젊은 세대의 적응력에 제약
- 새로운 노동수요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적 미스매치도 심화될 전망이다.
- 청년 실업문제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본격적인 정년연장 내지 고용연장의 부담으로 작용

8

03 핵심과제: 청년 일자리 확보 정책방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과 교육체계의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며, 기업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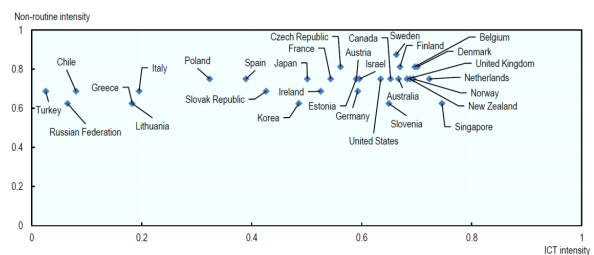


04 핵심과제: 성인기 교육 및 훈련

| 우리나라 노동자가 처한 현실

빠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노출

- 인구 고령화 외에도 디지털, 저탄소 전환 가속화
-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자동화 가능 직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OECD, 2019).



자료: OECD(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참여는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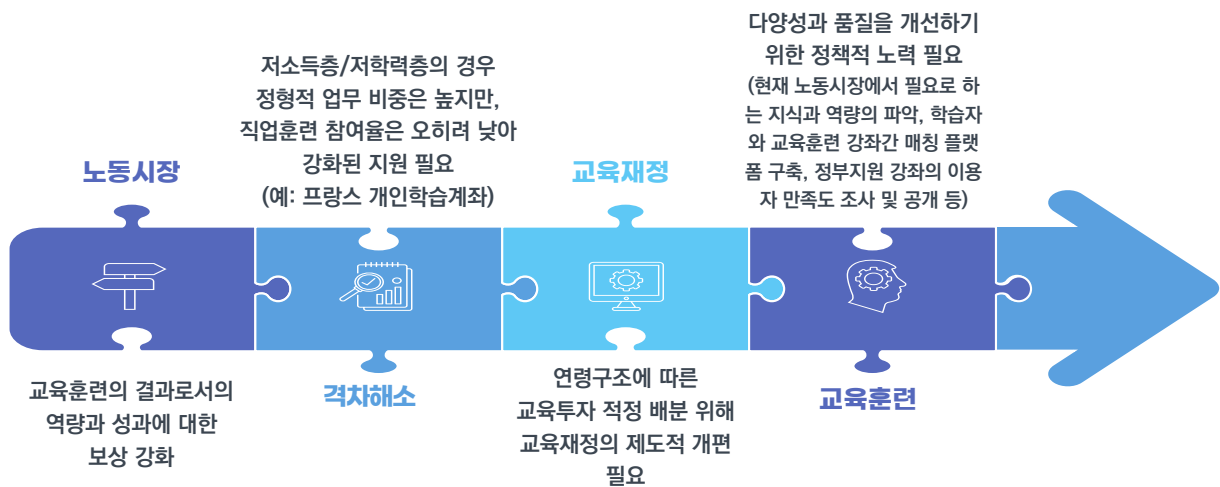
- 국제비교에서 직무무관 교육훈련 참여비중은 33개국 중 2위로 높게 나타나지만, 직무관련 교육훈련 참여비중은 33개국 중 21위로 낮은 편(박윤수, 2021)
- 국제 비교결과는 우리나라의 직무관련 교육훈련이나 인지능력(수리능력)의 임금 보상이 약하거나 없는 반면, 사업체규모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보상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박윤수, 2021).

04 핵심과제: 성인기 교육 및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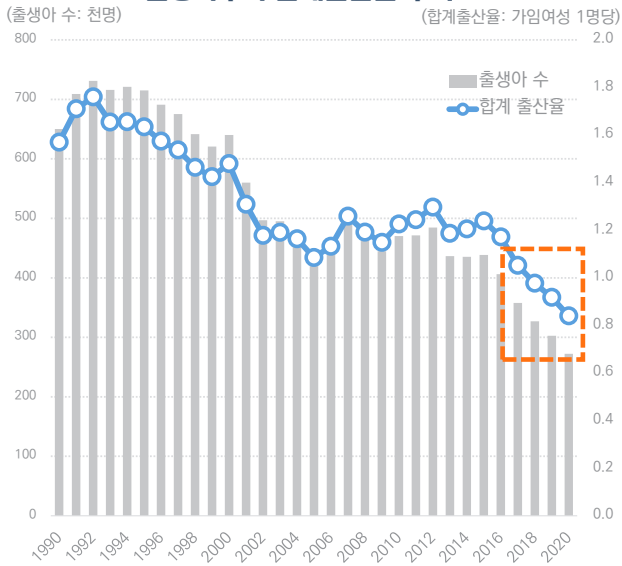
04 핵심과제: 성인기 교육 및 훈련 정책방향

성인기 교육 및 훈련 참여를 제고하고 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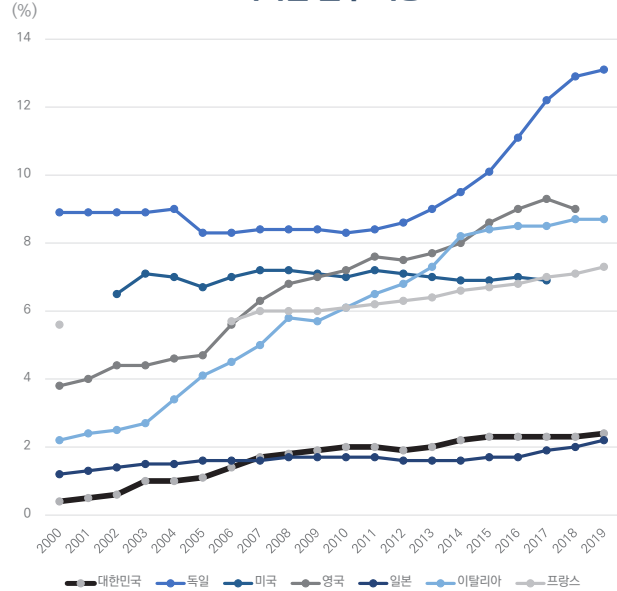


05 추가적 논의: 저출산 추세 및 이민 정책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외국인 인구 비중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거점형 지역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문운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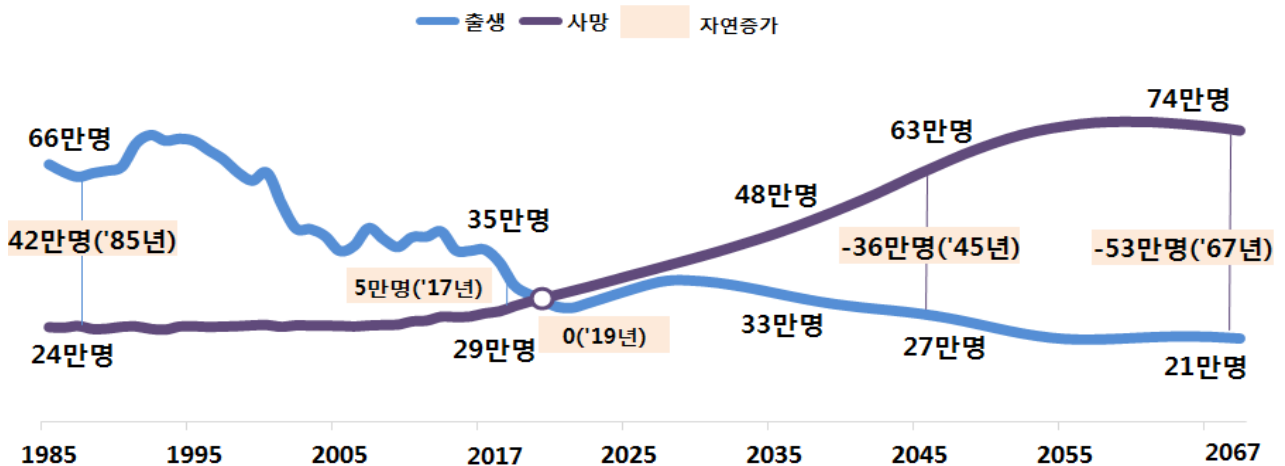
Contents

- 01 지역 간 격차 : 수도권 집중
- 02 인구이동과 질적격차 확대
- 03 거점형 지역발전

01 지역 간 격차 : 수도권 집중

01 인구 자연감소

| 인구 : 2019년 부터 인구 자연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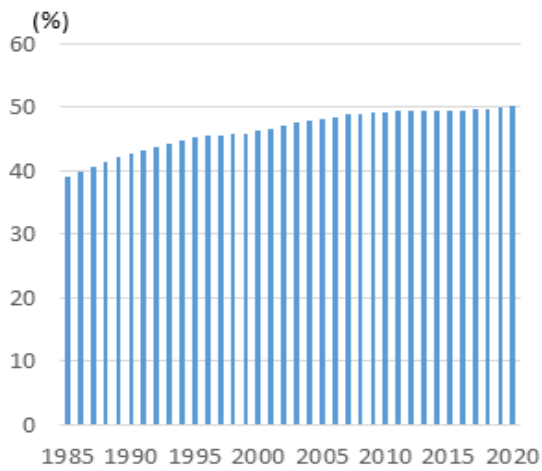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

02 수도권 집중

| 인구 수도권의 인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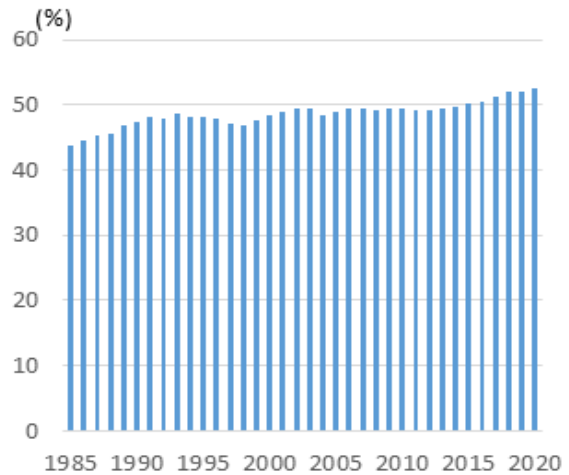
▪ 2019년 수도권 인구비중 50% 초과함



자료: 행정안전부

| 지역총생산(GRDP) 수도권의 총생산비중

▪ 2015년 이후 수도권의 총생산비중이 50%를 넘어섬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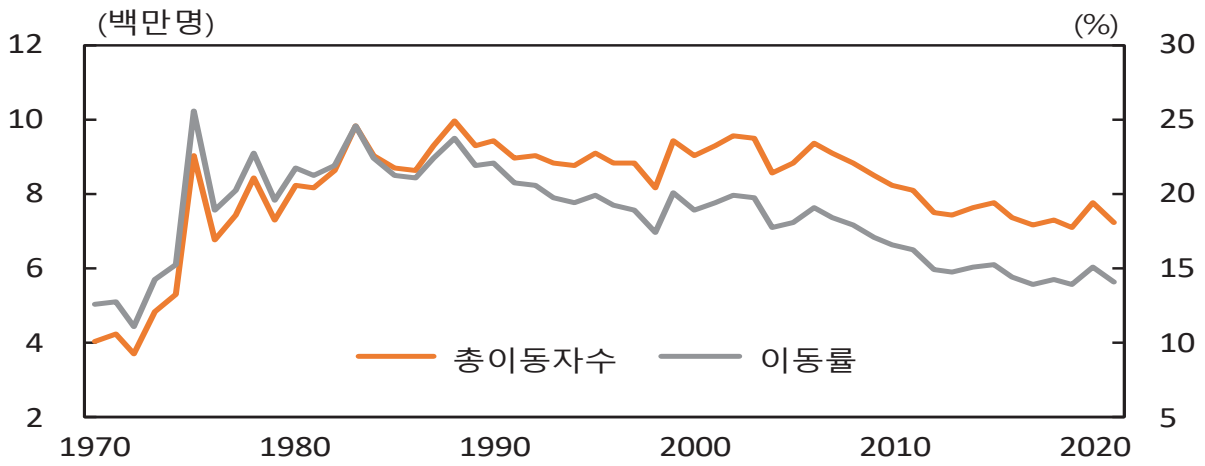
5

02 인구이동과 질적격차 확대

03 인구이동

| 인구이동 : 2010년대 들어 인구이동 감소

- 2010년까지 9백만명대 인구이동
- 전 인구대비 이동률은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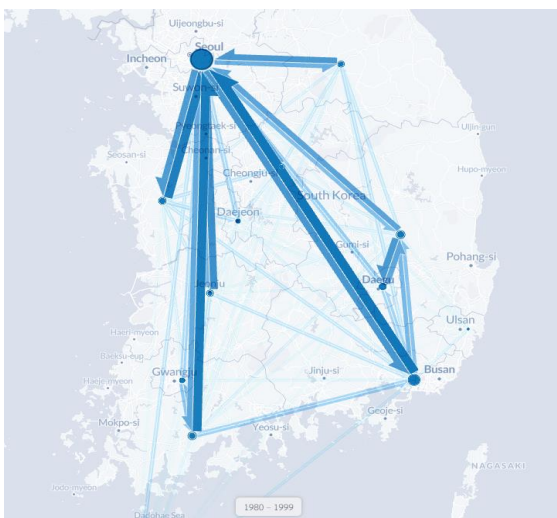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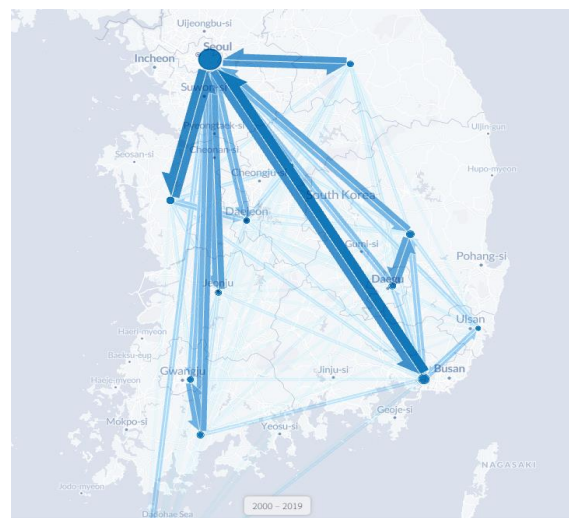
04 지역 간 인구이동

| 광역시도 간 인구이동 (1980-199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광역시도 간 인구이동 (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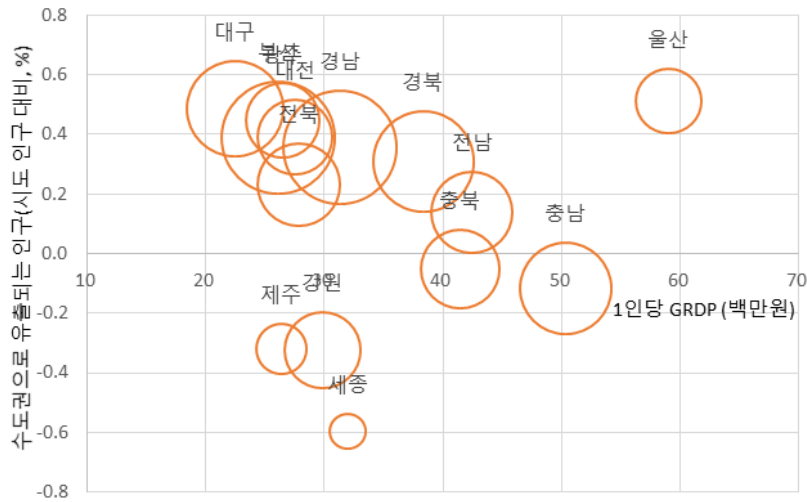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8

05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 1인당 GRDP가 낮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높음

- 울산과 세종, 제주, 강원을 제외한 지역에서 1인당 GRDP가 낮을수록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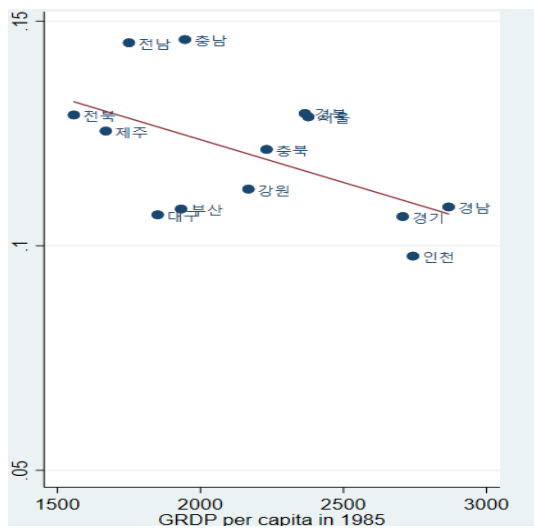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9

06 지역 간 격차의 수렴

| 1인당 지역총생산의 수렴 (1985-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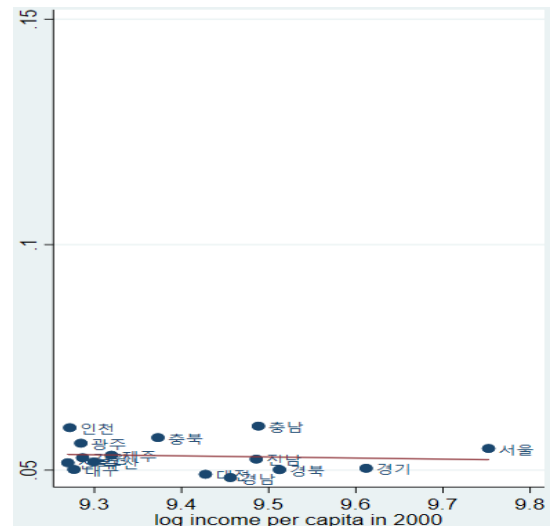
- 1인당 지역총생산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임



자료: 통계청

| 1인당 소득의 비수렴 (2000-2015)

- 2000년 이후 소득과 성장은 무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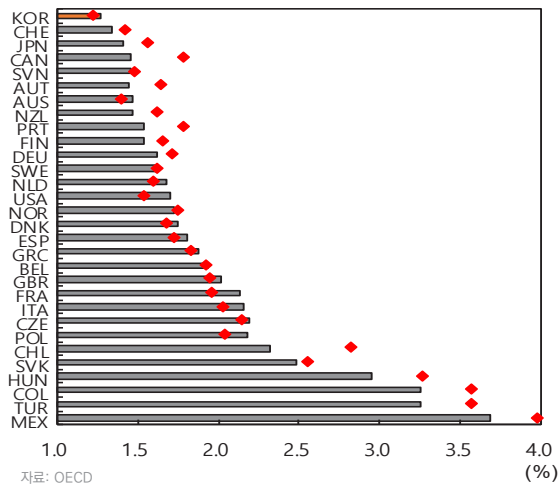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10

07 국가별 지역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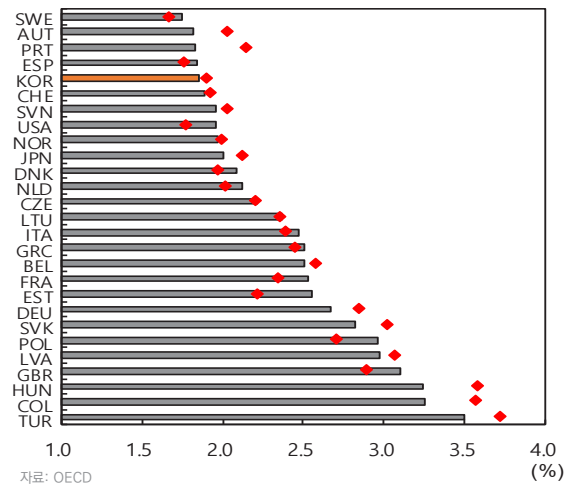
| 광역지자체 간의 격차 (2008, 2018)

- 광역지자체 간의 격차는 OECD 중 최상위
- 2008년에 비해 격차는 확대



| 기초지자체 간의 격차 (2008, 2018)

- 기초지자체 간의 격차가 양호한 편
- 2008년에 비해 다소 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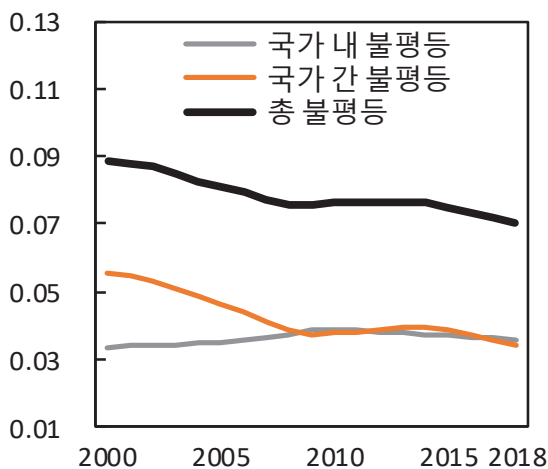


11

08 지역 간 격차의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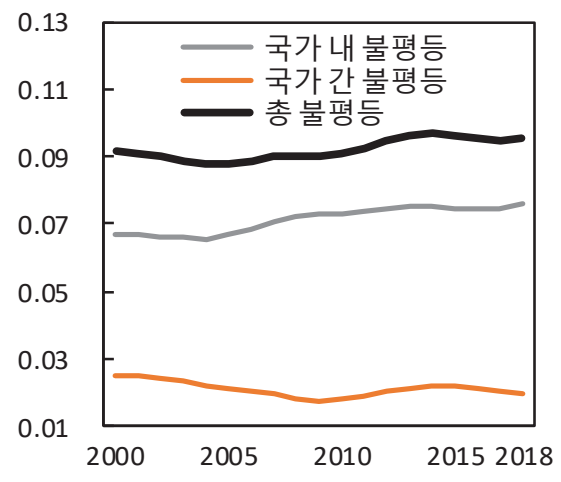
| 광역지자체 간의 격차 (2000-2018)

- 국가 간 불평등이 완화되며 지역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 기초지자체 간의 격차 (2000-2018)

- 국가 내 불평등의 확대에 의해 지역 간 격차가 커짐



12

03 거점형 지역발전

09 집적경제의 효과

일반기업

전국에 고르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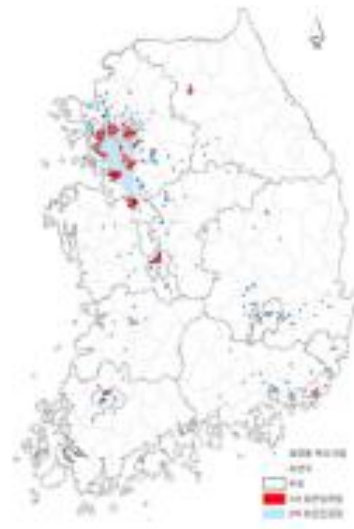
혁신형 기업

수도권과 거점도시 주변에



혁신성장기업

주로 수도권과 대전 등 광역시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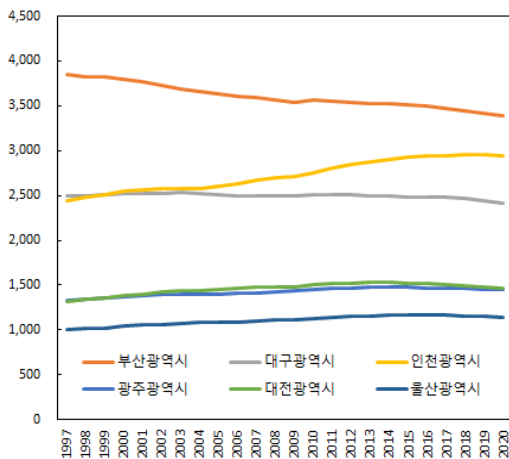


자료: 강호제 외(2016), 국토연구원

10 광역시의 인구 감소

| 광역시 인구추이 (199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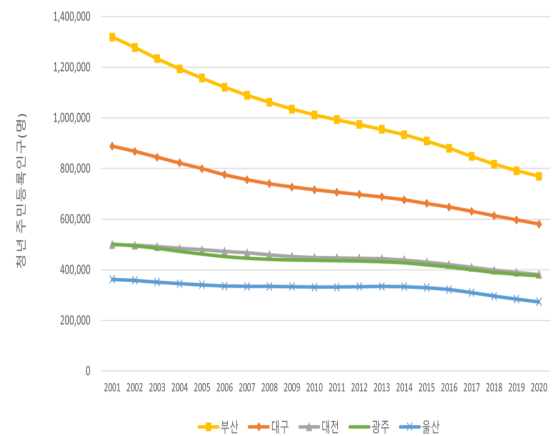
▪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서 인구감소



자료: 행정안전부

| 청년층의 감소 (2001-2020)

▪ 지방광역시의 청년층의 감소는 더욱 빠름



자료: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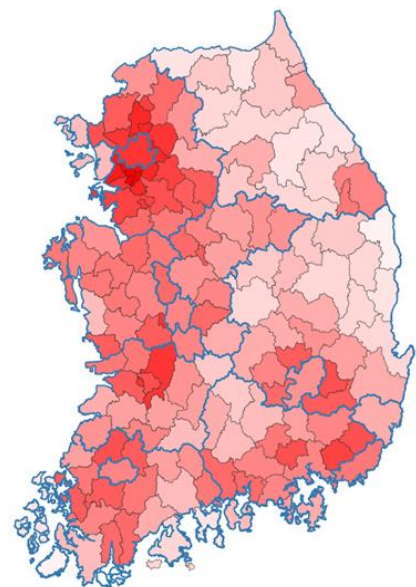
11 거점도시의 역할

집적경제의 효과

- 거점도시 내 집적효과 → 생산성 향상 → 거점도시의 고용 증가 → 거점도시의 인구 증가 →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 → 거점도시와의 연계 →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도시의 역할

- 고속권·고학력 일자리의 집적효과
- 지역의 허브(Cognitive hub) 역할
- 의료·문화·교육의 중심지
- 교통중심지로서 주변지역과 연계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코로나19와 사회안전망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며 사회안전망 확대

- 사회안전망은 시기별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며 확대되어 옴.
- 1997년 외환위기 대량실업, 빈곤 확대에 대응하여 근로연령층을 포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 2008년에는 근로빈곤에 대응하여 근로장려금 도입, 도입 당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상 및 급여수준이 확대

코로나19는 다시금 현 사회안전망의 한계 부각

-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코로나19 위기는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냄.
 -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밖에 있는 자영업자, 저소득 임금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음.
 - 하지만 기존 사회안전망 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한시적 지원을 여러 차례 시행

코로나19와 사회안전망

보건경제 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확대 우려

- 위기 시 고용충격이 저학력,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크게,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소득격차 확대 우려
 - 과거 다섯 차례 감염병 이후 소득불평등 확대 관찰(Furceri et al., 2020)
- 이번 코로나19 위기 시에도 저소득가구 중심으로 시장소득 감소가 더 크게, 더 오래 관찰됨.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일자리 미래와 사회안전망 필요 증대

-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으며 향후 지속 예상
 - 기술혁신 적용 확대에 따라 일자리 총량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자리의 구성 및 성격은 크게 변화할 것
- 일자리 파괴 및 창출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적
 -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격한 조정부담 완화 및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 지원

Contents

- 01 **코로나19 소득지원 효과**
- 02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체계 평가**
- 03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논의**

01

코로나19 소득지원 효과

01 기존 소득지원과 코로나19 대응 현금지원의 영향

기존 소득지원이 피해계층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여러 차례 한시적 현금지원 시행

기존 소득지원과 한시적 현금지원의 소득분배효과를 구분하여 분석

- '20년 3분기부터의 현금지원이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선별적 지원임을 활용하여 효과 구분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자료 이용

- 모든 현금지원이 사회수혜금으로 조사되어 개별 지원의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 횡단면 분석의 한계로 종사상지위 변화에 따른 효과를 통제할 수는 없으나, 비공개 패널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 도출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시장소득 감소는 주로 소득 1,2분위에서 크게 나타나며, 장기간 지속

소득분위별 '19년 동기 대비 균등화 시장소득 증감

단위: 만원, 괄호안은 '19년동기대비%

| | 전체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 '20.1 | 7.2 (3.0) | 0.1 (0.2) | 2.3 (1.6) | 6.1 (2.8) | 13.1 (4.5) | 15.1 (2.9) |
| '20.2 | -10.0 (-4.2) | -11.9 (-28.5) | -9.0 (-6.0) | -3.9 (-1.8) | -1.8 (-0.6) | -23.8 (-4.8) |
| '20.3 | 4.5 (1.9) | -3.4 (-8.4) | -1.8 (-1.2) | 2.7 (1.2) | 9.9 (3.2) | 15.6 (3.1) |
| '20.4 | 3.6 (1.4) | -3.9 (-8.7) | -0.3 (-0.2) | 2.3 (1.0) | 7.8 (2.5) | 11.5 (2.2) |
| '21.1 | 5.5 (2.3) | -3.9 (-12.0) | 0.3 (0.2) | 8.3 (3.9) | 15.3 (5.3) | 7.8 (1.5) |
| '21.2 | 3.8 (1.6) | -4.2 (-10.0) | 1.6 (1.0) | 8.0 (3.7) | 7.8 (2.7) | 5.6 (1.1) |
| '21.3 | 18.9 (7.7) | 2.1 (5.1) | 9.5 (6.1) | 16.2 (7.2) | 23.4 (7.7) | 43.7 (8.7) |

자료: 가계동향조사 '19, '20, '21년 분기별자료

가구의 종사상지위별 현금지원

'20년 3분기와 '21년 1분기 소상공인 대상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의 현금지원이 크게 확대

'19년 동기 대비 가구의 종사상지위별 현금지원의 증감

단위: 만원, 괄호안은 '19년동기대비%

|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직 |
|-------|-----------------|-----------------|-----------------|-----------------|-----------------|-----------------|
| '20.1 | 0.1 (0.9) | 1.1 (14.0) | 1.5 (23.3) | -0.7 (-13.7) | 0.8 (13.7) | 4.8 (26.6) |
| '20.2 | 33.3 (499.9) | 32.1 (476.7) | 30.4 (438.4) | 34.6 (792.6) | 33.6 (464.7) | 31.0 (150.1) |
| '20.3 | 5.7 (61.2) | 0.8 (5.8) | 1.7 (11.9) | 7.9 (175.3) | 11.4 (116.5) | 5.0 (20.3) |
| '20.4 | 1.8 (24.1) | 2.5 (40.1) | 3.4 (45.1) | 8.8 (355.6) | 3.7 (65.5) | 6.2 (28.4) |
| '21.1 | 4.0 (51.1) | 2.0 (25.3) | 8.7 (135.7) | 20.1 (422.4) | 17.0 (280.8) | 12.2 (67.7) |
| '21.2 | 3.2 (48.0) | 3.9 (57.4) | -3.7 (53.5) | 9.1 (207.8) | 6.6 (91.2) | 8.9 (43.1) |
| '21.3 | 18.1 (195.9) | 12.5 (95.7) | 14.8 (101.2) | 30.1 (663.4) | 25.3 (257.5) | 15.6 (63.2) |

자료: 가계동향조사 '19, '20, '21년 분기별자료

현금지원의 빈곤감소효과: 전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19년 동기 대비 뚜렷하게 증가하나, 현금지원을 합산한 소득 기준으로는 증가폭이 감소 또는 '19년 동기와 유사

빈곤율 개선효과

| |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A) | 시장소득+현금지원 기준 빈곤율 (B) | 현금지원의 빈곤율 감소효과 (=A-B) | 2019년 동기 대비 A-B |
|-------|-----------------|----------------------|-----------------------|-----------------|
| '19.1 | 0.213 | 0.197 | 0.016 | |
| '19.2 | 0.192 | 0.174 | 0.018 | |
| '19.3 | 0.197 | 0.172 | 0.025 | |
| '19.4 | 0.184 | 0.172 | 0.011 | |
| '20.1 | 0.209 | 0.193 | 0.016 | 0 |
| '20.2 | 0.238 | 0.176 | 0.062 | 0.044 |
| '20.3 | 0.208 | 0.176 | 0.032 | 0.007 |
| '20.4 | 0.196 | 0.178 | 0.019 | 0.008 |
| '21.1 | 0.226 | 0.195 | 0.032 | 0.016 |
| '21.2 | 0.206 | 0.180 | 0.026 | 0.008 |
| '21.3 | 0.209 | 0.170 | 0.039 | 0.014 |

자료: 가계동향조사 '19, '20, '21년 분기별자료

현금지원의 빈곤감소효과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지원은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감소에 기여

반면, 임시근로자 가구에서는 '20년 2분기를 제외하고 현금지원의 빈곤감소효과는 '19년과 유사
→ 해당 가구의 빈곤율 증가에 대응한 기존 복지지원의 빈곤감소효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

현금지원의 빈곤감소효과: 임시근로자 가구 vs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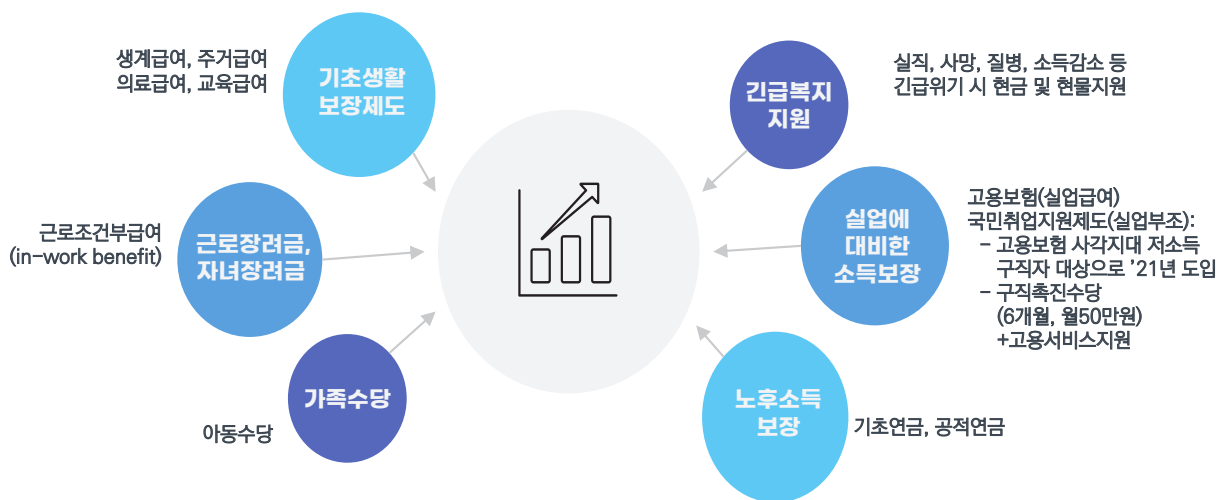
| |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A) | | | | | | | | | |
| 임시근로자 | 0.281 | 0.279 | 0.288 | 0.281 | 0.293 | 0.375 | 0.322 | 0.299 | 0.272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0.218 | 0.217 | 0.202 | 0.163 | 0.249 | 0.315 | 0.242 | 0.201 | 0.290 |
| '19년 동기 대비 현금지원의 빈곤감소효과(A-B) | | | | | | | | | |
| 임시근로자 | | | | | -0.027 | 0.091 | 0.004 | -0.001 | -0.029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 | | 0.001 | 0.064 | 0.020 | 0.004 | 0.027 |

자료: 가계동향조사 '19, '20, '21년 분기별자료

02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체계 평가

02 소득보장체계



02 소득보장체계 평가

경기대응효과

- 근로연령층은 평상시 스스로 일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나, 경제적 위기 시 다시금 회복할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필요
- 고용·소득충격 발생 시 이에 대응하는 소득지원기능 평가

정합성

-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지원정책의 정책목표: 소득지원, 자립지원
- 소득보장과 근로유인 두 가지에 대해 소득보장정책들 간 연계를 고려한 정합성 검토
- 근로연령층 빈곤가구에 한정

13

02 I. 경기대응효과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지원정책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다시금 스스로 자립하도록 지원해야 함.

경기대응적 기능(counter-cyclicality): 경기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소득지원정책 수급 및 급여지출이 반응하는지 평가

- 경제적 상황을 대표(대리)하는 지역별 실업률에 따른 소득지원정책 수급 및 급여액의 변화 분석
-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분석

분석내용

- 지역단위 분석: 시·도별 실업률이 시·도별 인구당 급여지출액에 미친 효과 분석
- 가구단위 분석: 지역별 실업률이 근로연령층 가구의 소득지원제도 수급확률에 미친 효과 분석

14

I. 경기대응효과 평가: 지역단위 분석

실업급여에서 실업률 상승에 따라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경기대응성 확인
 근로·자녀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에서는 이러한 경기대응성이 관찰되지 않음.

- 다만 긴급복지지원은 가용한 자료의 제한으로 분석기간이 짧음에 유의

시도별 실업률과 인구당 급여지출액

| | 실업급여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
|---------|-------------------|-------------------|----------------|------------------|
| 지역별 실업률 | 52.41* (27.04) | -21.14 (64.09) | 0.57 (1.57) | 32.24 (22.08) |
| 지역 고정효과 | ○ | ○ | ○ | ○ |
| 연도 고정효과 | ○ | ○ | ○ | ○ |
| 분석연도 | 2006-2019 | 2006-2019 | 2009-2019 | 2006-2019 |
| 관측치 수 | 49,747 | 49,747 | 37,740 | 49,747 |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고용보험통계연보, 국세통계연보

I. 경기대응효과 평가: 가구단위 분석

실업급여에서 실업률 상승에 따라 가구의 수급확률이 증가하는 경기대응성 확인
 기초생활보장 및 근로·자녀장려금에서는 경기대응성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음.

지역별 실업률과 소득보장제도 수급여부 (FE)

| | 실업급여 | 기초생보 | 근로·자녀장려금 | 전체 |
|---------|-------------------|------------------|------------------|--------------------|
| 지역 실업률 | 0.750* (0.446) | 0.290 (0.311) | 0.525 (0.459) | 1.247** (0.607) |
| 지역 고정효과 | ○ | ○ | ○ | ○ |
| 연도 고정효과 | ○ | ○ | ○ | ○ |
| 분석연도 | 2006-2019 | 2006-2019 | 2009-2019 | 2006-2019 |
| 관측치 수 | 49,747 | 49,747 | 37,740 | 49,747 |

자료: 한국복지패널 2-15차

I. 경기대응효과 평가: 가구단위 분석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

- 경제활동을 한 적이 있으나 고용보험에 한 번도 가입하지 않은 가구주의 가구와 고용보험 가입이력 있는 가구주의 가구로 구분

고용보험 가입이력 있는 가구에서 실업급여 및 전체 소득지원제도의 경기대응성이 뚜렷하게 관찰 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가구에서는 소득지원의 경기대응성이 관찰되지 않음.

고용보험 가입여부별 분석

| | 고용보험 가입 | | | | 고용보험 미가입 | | | |
|---------|--------------------|--------------------|------------------|------------------|-------------------|-------------------|-------------------|------------------|
| | 전체 | 실업급여 | 기초생보 | 근로·자녀장려금 | 전체 | 실업급여 | 기초생보 | 근로·자녀장려금 |
| 지역별 실업률 | 1.688** (0.767) | 1.421** (0.623) | 0.405 (0.328) | 0.302 (0.560) | -0.008 (1.057) | -0.467 (0.514) | -0.311 (0.684) | 0.951 (0.844) |
| 지역 고정효과 | ○ | ○ | ○ | ○ | ○ | ○ | ○ | ○ |
| 연도 고정효과 | ○ | ○ | ○ | ○ | ○ | ○ | ○ | ○ |
| 분석연도 | 2006- 2019 | 2006- 2019 | 2006- 2019 | 2009- 2019 | 2006- 2019 | 2006- 2019 | 2006- 2019 | 2009- 2019 |
| 관측치 수 | 22,283 | 22,283 | 22,283 | 16,054 | 13,305 | 13,305 | 13,305 | 8,694 |

자료: 한국복지패널 2-15차

02 II. 정합성 평가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지원정책은 소득지원과 함께 근로 및 자립유인을 정책목표로 삼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30% 근로소득공제 신설
- 근로장려금은 근로조건부 지원이며, 2019년 재정규모가 3배 이상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지원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정책들 간 연계를 고려하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제고 차원의 정합성 검토

근로유인은 한계세율(추가적 근로 비용) 및 평균세율(경제활동참가 비용)을 통해 검토

$$\text{한계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 = \frac{\text{복지혜택 감소} + \text{세금 증가}}{\text{추가적인 근로소득}}$$

≈ 1 : 추가적인 근로를 통한 소득은 0에 가까움

$$\text{평균세율(participate tax rate)} = \frac{\text{근로 시 복지혜택 감소} + \text{세금 증가}}{\text{총근로소득}}$$

II. 정합성 평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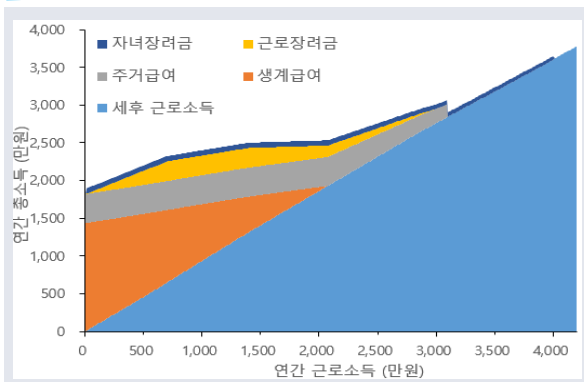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장려금

근로연령 빈곤가구의 10.9%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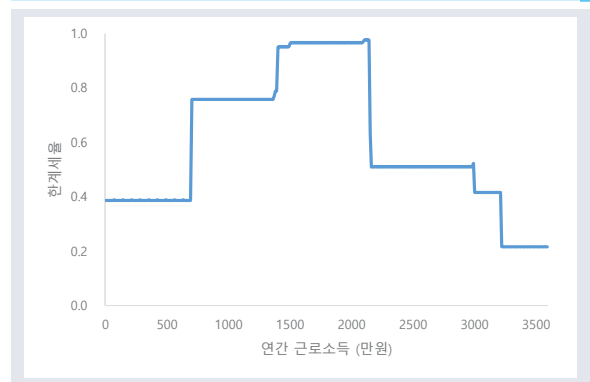
(3인가구 기준) 가장 높은 한계세율은 97%로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점감구간이 연계된 생계급여 탈수급 직전구간에서 높게 관찰됨.

- 97%의 한계세율은 1만원 근로소득 증가 시 9,700원의 세금 증가와 복지 혜택 감소로 인해 총 가구소득은 300원 증가함을 의미

총소득



한계세율



II. 정합성 평가 (1)

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장려금

한계세율 계산 시 1만원의 근로소득 증가 결정은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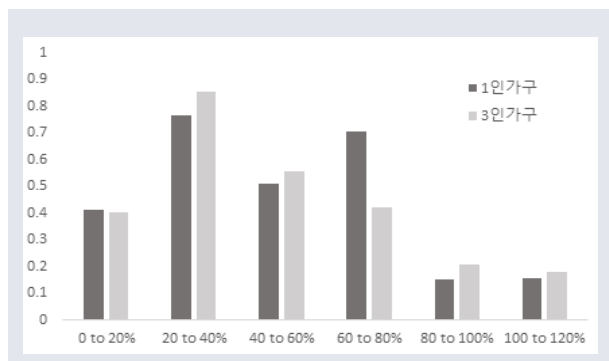
근로소득 증가가 기준중위소득의 20% 단위로 이뤄진다고 가정

- 1인 가구: 연간 440만원 단위 근로소득 증가 (최저임금 기준 주 10시간)
- 3인 가구: 연간 960만원 단위 근로소득 증가 (최저임금 기준 주 20시간)

최고 한계세율은 3인 가구 86%, 1인 가구 77%로 생계급여 탈수급 직전구간에서 높게 관찰

두 제도의 연계로 인해 탈수급 구간에서의 한계세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고려 필요

한계세율



II. 정합성 평가 (1)

근로장려금+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만 수급: 근로연령 빈곤가구의 32.9%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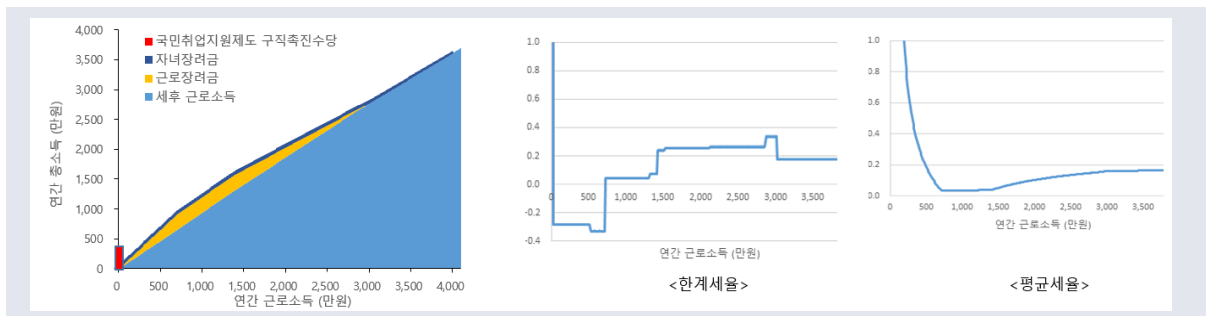
- 실직 시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6개월, 월50만원) 수급 가정

근로유인에 있어서는 양호

- 근로장려금 하에서 음(-)의 한계세율을 보임.
- 구직촉진수당으로 인해 평균세율은 저소득구간에서 증가하나, 단기 영향

하지만, 실직 및 저소득구간에서 보장되는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불충분

- 특히, 실직 시 구직촉진수당은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유지에 미흡



03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03 정책방향

근로연령 소득지원: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며 역동적 회복 지원 필요

- 현 소득지원정책은 경제적 상황 악화 시 지원이 충분치 않음.
 - 실업급여는 경기대응기능이 관찰되나, 취업자 중 49%는 미가입
 - 근로장려금은 일년에 1~2회 지급되어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서는 한계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논의되는 대안들 검토

- 생계급여 확대 또는 유사하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며 근로빈곤층 포괄
 -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 하에서는 근로유인 저해우려가 큼.
 - 무기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하에서는 소득재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에, 다시금 근로빈곤층을 충분히 포괄 못할 우려
-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 적절한 수준의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큼.
 - 지원수준을 낮추는 경우 경제적 위기에 대응한 지원으로서는 불충분하며,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기존 한계를 보완하기 어려움.

23

03 정책방향

실업부조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 대상 지원 강화
- 소득과 재산기준을 크게 완화하여 근로연령층을 넓게 포괄할 수 있음.
 - 현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60%, 순자산4억원을 기준으로 함.
- 아직 도입초기로 지원수준 및 기간이 좁게 설계되어 제한적 역할
 - 개인 단위로 6개월간 월50만원 지급: 부양가족(특히,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의 생계유지에 불충분
 - 6개월로 수급기간이 한정되어, 취업취약계층의 재취업까지 충분한지 검토 필요
- 부양자녀를 둔 경우 추가적 현금지원 제공, 제한된 횟수 내에서 수급기간 연장 신청 허용, 주택가격 상승 및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재산기준 완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소극적 성격의 복지와의 차별화

24

03 정책방향

근로장려금 강화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또는 이전 반기 소득 기준으로 연1~2회 지급되어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 어려움.
-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마련 추진과 더불어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최소 분기 이하로 축소
- 일 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포괄범위 확대를 위해 재산기준 확대
 - 현재 총재산 2억원 기준으로 소득전환가능 재산을 과대평가

생계급여 수급자 구성 변화에 맞추어 자립지원

- 실업부조 도입강화에 따라 최후의 안전망인 생계급여에 남는 근로능력수급자는 자활역량이 낮은 취약계층일 것이며, 자활지원도 수급자 구성에 맞추어 변화될 필요

25

03 정책방향

현물, 사회서비스 강화

-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욕구에 대응한 현물,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 주거, 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수급기준 확대를 통해 근로연령층을 포괄하는 범위 확대
- 근로연령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 및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돌봄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특히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과 결합된 돌봄서비스를 통해 학습 보완의 기회 확대

26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